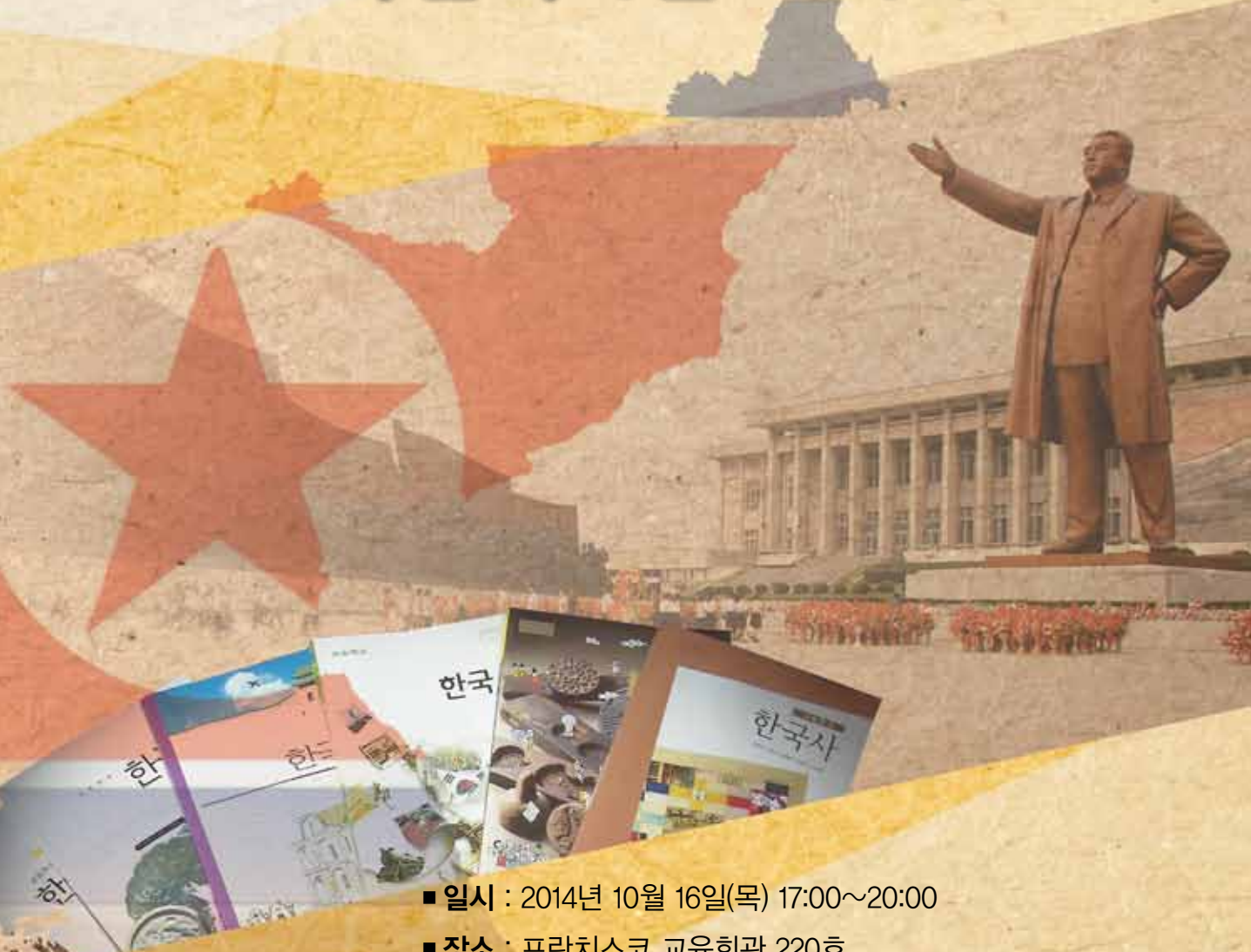


한국사 교과서에 투영된 북한역사관 세미나



- 일시 : 2014년 10월 16일(목) 17:00~20: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최 : 한국현대사학회,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K, 한반도선진화재단
- 주관 :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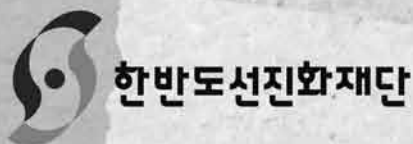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사 교과서에 투영된 북한역사관 세미나



- 일시 : 2014년 10월 16일(목) 17:00~20: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최 : 한국현대사학회,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K, 한반도선진화재단
- 주관 :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연구소



| 일정 |

사회: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

제1부	16:30~17:00	등록 및 접수
	17:00~17:20	개 회 사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제2부	17:20~19:00	발제 및 토론
		<div>[주제 1]</div> <div>역사교과서를 지배한 북한 전체주의 사관</div> <div>[발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div> <div>[토론] 조영기 고려대 교수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div>
		<div>[주제 2]</div> <div>북한 역사교과서 「조선역사」의 ‘근대사’ 서술에서 배제와 부정</div> <div>[발제] 이명희 공주대 교수(한선재단 교육연구소장)</div> <div>[토론] 이인정 통일교육원 교수</div>
		<div>[주제 3]</div> <div>북한의 「현대조선역사」와 대한민국 고등학교 ‘한국사’의 현대사 서술 비교</div> <div>[발제]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K 대표</div> <div>[토론] 김신희 북한대학원대학 연구교수</div>
제3부	19:00~20:00	종합토론
		폐회

| 목 차 |

한국사 교과서에 투영된 북한역사관 세미나

역사교과서를 지배한 북한전체주의 사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07

북한 역사교과서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에서 배제와 부정

이명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35

북한 『현대조선역사』 등 역사교재의 ‘현대사’ 서술 분석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57

역사교과서를 지배한 북한전체주의 사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 목 차 〉

Ⅰ. 문제 인식

Ⅱ. ‘현대조선역사’ 서술과 한국 역사교과서와 비교

1. 독립이전 김일성의 활동
2. 미국을 민족분단의 원인자로 제시
3. 미-소군정의 통치 방식 비교
4.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
5. 친일(親日)청산과 토지개혁
6. 6.25(한국) 전쟁
7. 미국과 냉전체제
8. 이승만대통령과 김일성
9. 남북한의 경제번영에 대한 기술

Ⅲ. 결론

대한민국을 짓밟고 전체주의를 미화한 교과서식

I. 문제 인식

국민 기본교육을 위한 교과서로서의 역사란 국가공동체가 겪어온 과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무한대의 사실로 구성된 역사를 교과서로 재구성하여 교육하는 이유는 민족과 국가가 성취하고 걸어온 삶의 궤적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유된 인식에 기반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 중 국민 기본교육으로 담아야 할 역사서술의 대상과 기준은 인류문명사적 보편가치의 지향이면서도 민족과 국가가 맞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룩하고 성취해온 기록이자 기억의 형성일 수밖에 없다.

본 글은 국민 기본교육으로 실시되는 역사교재인 고등학교 근현대사의 내용이 담고자한 역사교육의 목적과 서술을 어떤 방향에서 재구성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적으로 북한의 역사서〈현대조선역사〉(1983)와 대한민국 검인정 교과서(비상교육, 미래엔, 천재교육, 두산동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 비교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가 i) 그와 같은 역사서술 대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ii) 그런 내용으로 서술되게 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9개 주제를 선별하여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얼마만큼 북한의 역사서술과 관련성을 갖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전체주의체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 서술과의 ‘특별한 관계’를 제시하고, 북한 역사서의 아류(亞流) 수준으로 재편집되어있는 현행 역사교과서가 새롭게 인류 보편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명사, 민족사, 국가사의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현대조선역사’ 서술과 한국 역사교과서와 비교

1. 독립이전 김일성의 활동

개인숭배 전체주의를 만든 주역이던 김일성은 결코 독립운동의 주역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조선역사〉(1983)는 허위사실에 의한 날조로 김일성주도의 항일활동을 대대적으로 조작해냈다. 김일성이 한 것은 중국공산당 활동과 전체주의를 지향한 계급혁명, 그리고 전체주의자 스탈린 휘하의 소련군인으로의 활동이 전부다. 설사 북한 선전이 실제라 하더라도 당시 조국광복회 정

도 규모의 단체와 활동은 수천 개에 달했고, ‘보천보 전투’라는 면소재 주재소 습격사건 역시 단 한 명의 일본군과 경찰 희생도 없었던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개인숭배 차원에서 날조한 역사는 비판되고, 바로 잡혀져야 함에도 대한민국 교과서는 거꾸로 역사적 가치도 없는 공산당활동이나 ‘조국광복회’와 ‘보천보 전투’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 이어 1941년부터 일본과 중립(불가침)조약을 맺고 일본의 대미전쟁을 간접 지원한 소련과 스탈린군으로 활동했던 김일성은 근원적으로 독립투쟁을 할 수 없었다. 원폭투하 후인 1945년 8월 9일부터 단 6일간 소련군이 벌인 대일본전 때도 그는 참여하지 않았다. 독립운동사에서 김일성의 활동은 역사적으로 전혀 의미없는 수준이기에 서술 대상이 될수 없는 것임에도, 우리 교과서는 날조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역사로 교육시키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김일성은 1934년 3월 반일인민유격대를 <u>조선 인민 혁명군으로 개편</u>하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오는 획기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를 정연하게 확립하였다. (73)</p> <p>김일성은... 반일민족통일전선 조직체의 명칭은 각 계각층 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이 반영된 <조국광복회> 또는 <민족해방운동>과 같은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전선조직이 내세워야 할 강령의 기본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혔다. (100)</p> <p>김일성은 1936년 5월 5일 <u>조국광복회의 창건</u>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103)</p> <p>김일성의 친솔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일제가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국경경비진을 뚫고 1937년 6월 4일 보천보를 공격하였다. 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용감하고 민활한 전투행동으로 적들을 쓸어눕히면서 경찰관 주재소를 비롯한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순식간에 소탕하였다. (121)</p>	<p>만주 지역 곳곳에 수많은 항일 유격대가 조직되자, 중국 공산당은 이를 규합하여 동북 인민 혁명군(뒤에 동북 항일 연군으로 발전)을 편성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중 두 민족이 연대하여 항일 유격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한편, <u>동북항일연군</u> 내의 한인 항일 유격대는 국내 진출을 적극 도모하면서 함경도 일대의 <u>공산주의 세력</u>과 천도교도 등 민족주의 세력까지 통합하여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였다(1936). 그리고 국내 <u>조국 광복회</u> 세력의 지원 아래 항일 유격대의 일부가 <u>함경도 갑산의 보천보</u>로 들어와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을 파괴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만주에서 독립군이 모두 사라졌다는 일제의 선전이 거짓이며, <u>항일 투쟁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u> (미래엔 293)</p> <p>1936년에 <u>동북 항일연군</u>으로 개편하고, 일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단결을 추구하였다. 동북 항일 연군의 지휘관에는 한인들이 많이 있었다... <u>함경도 일대에도 조직을 확대하고, 보천보 전투 등 국내 진공 작전을 여러 차례 단행하였다.</u> 하지만 일제의 공세가 강화되자 이들은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기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소련군의 일원을 항일 운동을 지속하였다. (두산동아 247)</p>

<p>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군과 <u>보천보전투</u> 승리에 대한 소식은 순식간에 온나라 방방곡곡에 퍼져갔으며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던 <u>우리</u> <u>인민들의 가슴마다에</u> <u>희망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u> (123)</p>	<p>1936년 동북 항일 연군의 한국인 지휘관들이 중심이 되어 만주의 한인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포괄하는 통일 전선으로 <u>조국 광복회</u>를 결성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u>보천보</u>의 일본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는 등 일제를 놀라게 하였다. (천재교육 289)</p> <p>그날의 역사: <u>보천보를 습격하다</u> (두산동아 247)</p> <p>1936년 동북 항일 연군의 한국인 지휘관들이 중심이 되어 만주의 한인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포괄하는 통일 전선으로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보천보의 일본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는 등 일제를 놀라게 하였다. (천재교육 289)</p>
---	--

일본 군국주의의 궤멸은 미국과의 전쟁에 져기 때문이다. 일본 패망과 대한민국 독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및 미국 주도의 태평양전쟁을 이해시키고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졌던 4년에 가까운 미국의 대일본전쟁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맞다. 미국의 대일본전쟁을 제외한다면 중국대륙과 동아시아에서의 항일전쟁은 중국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중국 국민당과 장제스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이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우리 역사교과서는 김일성이란 이름만 명기하지 않았을 뿐 비중도 없고, 실체도 없었던 김일성중심의 항일투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들은 일제하 무장투쟁의 전개 과정을 서술함에 있어, 북한의 역사책 〈현대조선역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조국 광복회, 보천보 전투 등 공산주의의 투쟁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룬다. 무장투쟁 활동의 중심에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한 단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반해, 민족주의 계열 등의 항일무장 투쟁은 한두 줄 언급하는 정도다. 사회주의계열이 합류함으로써 “한국 광복군의 군사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두산동아 248)고 하거나, 사회주의계열의 항일투쟁을 부각시킨 후 그 투쟁세력이 “광복 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다”(미래엔 299)고 서술해 북한 정권이 항일운동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인식되게 만든다. 그랬던 소-중-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곧 전체주의체제를 만들었고, 곧 대한민국을 전면 침략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서술은 문명사로나, 보편가치의 구현이나, 혹은 대한민국사적으로나 용

납될 수 없는 것이다.

2. 미국을 민족분단의 원인으로 제시

일본 군국주의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해체된 것인데도 북한 역사서는 미국을 일본에 뒤이은 제국주의로 몰아가며, 미국이 38도선을 고안해 민족분열과 제국주의적 점령이었다는 주장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희생을 통한 대일전 승리로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대한민국이 해방 독립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일체 기록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전혀 있지도 않았던 소련군과 김일성의 독립운동처럼 미군의 분단과 한반도 절반의 점령을 부각시켜 서술함으로써 미국을 또다른 제국주의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동일하게 우리 교과서도 김일성체제의 역사서술처럼 미국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 패망과정을 일체 서술하지 않는다. 단지 일본 패망 후 미국이 ‘무장 해제를 구실’로 ‘점령군 행세’를 했다고 서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38도선을 미국이 제안한 것(미래엔 307, 비상 346)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 책임이 미국에게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소련이 참전 조건으로 제시했던 동아시아에서의 지배권과 이권 요구가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서술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전체주의의 역사서술과 같은 논리로 소련이 해방시켰는데 미국이 그 절반을 차지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서술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미국은 38도선을 고안해내고 조선을 분열시켰다...피를 흘리지 않고 서울까지 점령할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군대의 〈무장해제〉를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여 소미간에 나누어 한다는 것이었다...미제는 일본군대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38선이라는 분단선을 고안해냈으며 조선을 분열시킨 장본인으로 되었다.</p> <p>총소리 한방 울리지 않고 남조선을 점령한 미군은 조선독립의 방조자로서가 아니라 조선인민에 대한 정복자로, 통치자로 행세하면서 땀 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173)</p>	<p>“서울을 포함시켜야 했기에 38도선을 건의하였다. ...소련이 더 남쪽 선을 고집할 것으로 예상했던 나는 소련이 38도선 안을 받아들였다고 들었을 때 약간 놀랐다.” (미래엔 307)</p> <p>미국은 소련의 한반도 단독점령을 막기 위해 소련에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 점령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이남 지역은 미군이 관리하게 되었다. (비상, 346)</p>

실상 1945년 8월 9일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 시 미-소간 합의된 38도선이란 한반도의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의 기준선이었다. 그 무장해제 기준선을 공산제국주의 진출 확장선으로 만든 것은 소련이었다. 또한 합의된 38도선을 부정하고 6.25 침략전쟁으로 이끌며 공산제국주의를 더 확장시키고자 했던 것도 소련이었다. 그런 면에서 스탈린과 소련군이 제국주의군이고 한반도 북부에 전체주의 체제를 만든 근원이다. 알타회담과 포츠담회담이란 소련과 스탈린(J. Stalin)이 러-일전쟁에서 잃었던 동아시아지배력을 소련이 일본을 대신하여 다시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봉건적 제국주의 회담이었다.

북한 역사서는 이같은 사실을 조작하여 미국이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분단선을 고안하였고 민족분단을 획책하였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서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도 북한 교과서의 서술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미군을 제국주의군이자 민족분단 원인자로 제시하고 있다. 소련 제국의 확장으로 만들어진 한반도 분단이란 사실은 없어지고, 해방군인 미군을 분단을 만든 점령군이자 제국주의 세력으로 호도시킨 것이다. 다른 한편, 38도선 설정이 만주군과 일본 대본영군 간의 군사편제에 따른 기술적 결과라는 배경 설명이나 동유럽 등 소련주변국 전역에서 펼쳐진 소련제국주의의 영토 및 공산화 전략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이 제안했다는 것만을 부각시켜 미국을 분단 책임국가로 만들고 있다.

3. 미-소군정의 통치 방식 비교

현대조선역사와 대한민국 교과서는 1945~48년의 미-소 군정시기의 역사 서술의 초점을 소련은 한국(조선)의 자치기구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미국은 직접통치를 시행하면서 일제 통치기구를 활용하였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서술을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소련은 해방자이고 조선을 도와준 나라인 반면 미국은 제국주의이고 점령자였다는 잘못된 정반대의 서술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북한에서 펼쳐진 신의주, 함흥, 원산 등 소련의 야만적 약탈과 학살, 정치탄압과 민주적 국가로 탄생할 기회의 봉쇄라는 전 과정을 단 한 문장조차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하여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지원과 민주공화제 국가로 가는 제도기반의 마련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언급도 없다. 실제 역사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져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미제는 군정을 실시하면서 <u>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u>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조선주둔 미군사령관 하지는 그 통치기구가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였다...미제는 일제의 통치기구들을 존속시키면서 경찰을 비롯한 일본 관리들과 친일조선인관리들을 유임시켰으며 일제식민지통치시기 <u>법률까지도 그대로 적용하였다.</u> (174)</p> <p>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세운 지방자치기관들,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강제해산시켰다. 1945년 10월 17일 미군사령관 하지는 <군정청은 남조선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함으로써 각급 인민위원회들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며 조선인민에게 오직 <군정청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면서...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각 방면으로 박해하고 탄압하였으며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탄압정책을 반대, 항거하는 혁명가,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하였다. (175)</p>	<p>미국은 <u>조선 인민 공화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 등은 인정하지 않았고, 조선 총독부의 관료와 경찰 조직을 유지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u> 한편, 소련은 각지에 세워진 인민 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하여 <u>간접 통치</u>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비상교육 347)</p> <p>미군정은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통치에 나섰다. ... 소군정은 인민 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하는 <u>간접 통치</u> 방식을 취하였다. (미래엔 309)</p> <p>소련군은 인민 위원회를 이용한 <u>간접 통치</u> 방식을 취하였고, 미군은 군정을 선포하고 <u>직접 통치</u> 방식을 취하였다. 미군정은 초기에 일본인 관리와 식민 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또한, 인민 공화국을 비롯하여 <u>한국인이 만든 모든 행정 기구와 그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u> (천재 304)</p>

북한은 미군정이 일제의 통치기구를 비롯해 일본관리와 친일관리까지 유임하여 일제청산에 나서지 않았던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과서도 이를 수용해 ‘조선총독부의 관료와 경찰 조직을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야말로 친일, 반일과 상관없이 공산주의체제를 만드는데 협조했는지 여부로 숙청과 학살을 저질렀던 사실을 감추고 있다. 또한 북한 역사서는 미군정이 자생적인 지방자치기관들,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강제 해산시켰고, 박해하고 탄압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과서 역시 소군정은 북한의 자생적인 조직을 인정하고 자치가 가능하도록 간접통치를 한 데 반해, 미군정은 그와 같은 조직을 배제하고 직접통치를 했다고 함으로써 미군정이 한국에 극도로 가혹했고, 분단을 의도했던 것처럼 사실과 정반대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일제 식민국가의 해방자로 서술하지 않고, 또 다른 제국주의이자 민족분단 획책자로 그려낼수 있는 것은 거대한 왜곡이자, 공산전체주의 시각에 서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4.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 중 국민교육 교재인 교과서가 국가의 건국(정부수립)과정을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은 모두 건국(建國)이라 기술하고 그 위대한 의의를 설명하면서도, 오직 우리 민족이 만든 가장 근대적 국가이면서도 자유민주적 보편가치와 문명사를 바꾼 것은 성공한 국가에 대해서는 ‘건국’이란 표현 자체를 거부하고 ‘정부수립’이라 표현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반대 속에 만들어진 정부처럼 폄훼와 비난으로 가득차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에는 소련체제가 되면서 바로 정부체제가 만들어지고 공산혁명을 진행시켰다. ‘민주 기지’라고 강변하는 것에서 보듯 남은 소련과 김일성권력에게 남은 과제란 북한체제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와 소련의 위성국가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역사서나 한국의 교과서는 모두 동일하게 1) 한국의 정부수립은 정당성이 상실된 것이고 많은 반대와 문제가 있었던 것이란 점, 2) 한국 정부수립 이후 북한의 건국과 정부수립은 한국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통일정부가 포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맞춰져있다.

– 대한민국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김일성은 남조선에서의 단독정부수립음모를 분쇄하고 통일적인 민주주의 인민정부를 세우기 위하여...</p> <p>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u>연석회의</u>를 소집할 것을 다시 제기하였다. (223-224)</p> <p>남조선의 출판물이 쓴데 의하면 <u>투표장에 끌려나온 군중</u>은 〈투표치 않으면 완전히 좌익으로 몰아...〉이었다. 또한 이렇게 나온 군중은 붓뚜껑에 인주를 묻혀 그것을 〈후보자〉 이름 밑에 찍는 이른바 〈작대기수표〉를 하였으며 ... (277)</p>	<p>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남북이 분단될 위기에 처하자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중도 세력은 <u>북한과의 협상</u>을 통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일성에게 <u>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남북 협상)</u>을 제안하였다. ... (비상교육 350)</p> <p>통일 정부 수립 운동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김구가 암살되고(1949.6), 막을 내렸다. (미래엔 311)</p> <p>1948년 4월 평양에서 김구, 김규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u>연석회의와 남북 정치 지도자 간의 회담</u>이 열렸다(남북 협상). ...남북 분단을 막지는 못하였다. (천재 306)</p>

	<p>전남 광산군 서방면 투표소(1948.5.10) 미군정은 <u>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자에게 식량 배급표를 지급하였다</u>. 주머니를 다독이며 나오는 유권자의 모습이 보인다. (<i>미래엔</i>, 313)</p>
--	---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술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김일성은 회의에서 지체없이 전조선적인 통일적 중앙정부를 세우는 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았다... 김일성이 내놓은 통일적 중앙정부수립에 관한 방침은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p> <p>남조선 전지역에서의 <u>최고인민회의</u>의 대의원선거는 1948년 8월 25일 온민족의 비통한 열의와 감격 속에서 진행되었다. ...</p> <p>남조선에서는 반동들의 방해책동을 고려하여 <u>비밀리에 선거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인민대표들을 선출하고</u> 선출된 인민대표들이 북반부지역에서 모여 <u>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선거하기로 하였다</u>. ... (230)</p> <p>김일성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추대되었으며, <u>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u> ... (231)</p>	<p>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북한에서는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i>미래엔</i> 315)</p> <p>...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8월 25일 이북 지역에서 최고 인민 회의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9월 제1차 최고 인민 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이 제정되고,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곧이어 9월 9일 내각이 구성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 (<i>천재</i> 311)</p> <p>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 (<i>두산동아</i> 273)</p>

소련 지시로 김일성체제가 ‘주권 기관’이자 정부를 만들어 각종 공산혁명을 집행하기 시작한 기점은 이미 1946년 2월 8일이다. 소련과 조선공산당은 북조선에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현대조선역사 185)되었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현대조선역사 186)라고 했다. 북한의 역사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으로 진정한 “인민정권이 북조선에 수립되었다”고 밝혀왔다. 소련이 점령한 모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련은 이미 북한

에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와 영토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교과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이 제정’(천재 311)되었다는 등 북한 역사서에서 기술된 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8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은 분단정부를 만들었고 북한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는 선전용 서술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을 전후한 갈등’(309)과 같은 문제가 많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반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 수립 경축 집회’와 같은 사진(311)을 제시하고 있다.

– 제주 4.3사건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매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결사적으로 싸웠다... <u>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곳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났다.</u> 제주도인민들은 무장으로 반동경찰을 제압하고 <선거>를 완전히 분쇄해 버렸다. ... (227)</p>	<p>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자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중지 and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 (비상교육 351)</p> <p>제주도의 좌익 세력은 5·10 총선거를 앞두고 <u>단독 선거 저지</u>와 <u>통일 정부 수립</u>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1948.4.3). 미군정은 무력 진압을 시도했지만,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미래엔 312)</p> <p>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u>단독 선거 반대</u>와 <u>통일 정부 수립</u>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 (천재 309)</p>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를 폄훼하기 위해 제주 4.3사건 등을 왜곡하여 설명한다. 북한 역사서는 제주 4.3 무장투쟁을 ‘매국적인 단독정부 수립’ 반대이자 ‘통일정부 수립’ 투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남로당의 주도 하에 전개된 투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민주적 총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단독정부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이란 곧 공산혁명의 전국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반도 전체의 전체주의화에 있었던 것임에도 우리 교과서는 제주 4.3 사건을 북한의 역사서술체계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5. 친일(親日)청산과 토지개혁

친일청산이란 곧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체제를 자유민주체제로 바꾸는 것이고 일본주도적 경제사회를 민족주도적 산업경제로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근대 민주공화제를 만들고 개방적 민족산업체제와 민족문화를 번영시켰다는 점에서 친일체제를 가장 잘 청산한 나라이고 독립체제를 굳건히 한 나라다. 반면 북한에서는 전체주의와 폐쇄주의가 계속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에서 소련군국주의로 전환되었을 뿐 어떤 청산도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 교과서는 일본 군국주의보다 더한 소련 군국주의와 김일성가계의 전체주의적 지배를 감추고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을 처벌했냐, 안했냐를 가지고 다투는 내용으로 채워놓고 있다. 친일청산의 민족적, 보편가치적 의미를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한에서 일체 친일자에 대한 법, 조사, 심판 및 처벌이 없었던 것에 대한 비판은 일체 없으면서, 대신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친일청산에 대해 실패했고 문제가 많았고 그랬기에 대한민국은 정당성이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미제는 군정을 실시하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시켰다...미제는 일제의 통치기구들을 존속시키면서 경찰을 비롯한 일본관리들과 친일조선인관리들을 유임시켰으며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법률까지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174)</p> <p>미제는 ...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반동분자들을 집결시키기에 급급하였으며 그들을 군정기관내에 끌어 들여 식민지통치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다.</p> <p>미제는 대지주이며 친일자본가이며 제2차세계대전 때 조선청년들이 일본을 위하여 많은 피를 흘릴 것을 선전하던 민족반역자 김성수를 비롯하여 한국민주당 (...)계열의 반동분자들을 군정고문으로 임명하였으며 대법원장, 모두 친일매국노들로 채웠다. (175)</p> <p>북조선에서 심히 위축되어 있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 예속자본가들도 미제의 이러한 반동정책에 기대를 걸고 머리를 들려고 하였으며 적지 않은 자들이 남조선에 도망쳐 갔다. ... (176)</p>	<p>광복 직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미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헌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였다. ...</p> <p>그러나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 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구속되었고(국회 프락치 사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들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비상교육 352)</p>

<p>...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청산되고,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었으며 ... (196)</p>	<p>...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을 비호하였다...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되어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 (미래엔 314)</p> <p>탐구활동: 가상 포스터로 보는 광복 직후 남한 주요 정치 세력의 성향 반민족 행위자 청산에 소극적인 인물과 정당은? (미래엔 315)</p> <p>... 임시 인민 위원회는 친일 민족 반역자 및 지주의 5정보 초과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미래엔 315)</p>
--	--

김일성체제는 친일 및 일제청산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소비에트(Soviet) 공산화를 완성하기 위한 재산강탈만 있었다. 일본 군국주의보다 더 가혹한 전체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주도했을 뿐이다. 소비에트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주개혁(187, 196)이라는 명분으로 공장, 토지, 건물, 광산, 과수원 등을 가진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친일파로 몰아갔을 뿐이다. 단 한 명의 친일파에 대한 실명과 죄목을 거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친일청산작업은 대한민국에서 법률과 재판에 따라 진행되었고 김연수, 박흥식, 최남선, 이광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과 관련해 법률적, 도덕적 심판대에 서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 교과서는 한국에서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자 한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민주개혁으로 개인재산을 강제 국유화한 공산화를 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전체주의 체제화 과정을 미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란 공산혁명을 거부하는 자이거나 소련의 학정(虐政)에 대한 저항자를 처단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주와 농민간의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전현수, 15) 결과적으로 우리 교과서는 김일성체제의 역사적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한민국은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교육하게 만드는 반대한민국적 역사교과서인 것이다.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실시되었던 것은 그 본질이 농민에게 일시적인 경작권 배분을 한 이후 연이은 협동농장화와 국영농장화라는 공산주의체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토지개혁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계층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토지생산성의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공산전체주의화였고, 한국에서의 농지개혁은 세계사적인 성공사례였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이를 정반대로 기술하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 <u>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187)</u></p> <p>토지개혁법령은 <u>토지이용권은 발걸이하는 농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한 데 기초 ...</u></p> <p>– 일제의 소유토지와 <u>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지 및 5정보 이상을 가진 지주의 토지,</u></p> <p>... <u>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의 소유로 한다. (188)</u></p> <p>토지개혁법령은 <u>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가장 훌륭히 풀어주는 인민적인 법령이며 ... (189)</u></p> <p>토지개혁은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p> <p>〈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u>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하여 농업생산력을 ... (190)</u></p> <p>농촌의 사정도 다를 것이 없었다. 1945년 9월 <u>미제는 토지소유관계에서 종래와 변동이 없으며 지주는 소작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를 존속시키도록 하였다. (219)</u></p> <p>이승만정권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대중을 무마하기 위하여 실시한 <u>〈농지개혁〉은 오히려 큰 후과를 남기고 남조선인민들을 견잡을 수 없는 파산을 몰아넣었다. ... 〈분배〉받은 토지까지 지주와 부농에게 도로 빼앗기게 되었다. ... (454)</u></p>	<p>...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실질적인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이 진행되었다(1946.2). 임시 인민 위원회는 <u>친일 민족 반역자 및 지주의 5정보 초과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1946.3). (7/래엔 315)</u></p> <p>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u>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u></p> <p>1949년 제헌 국회는...<u>농지 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개혁 방식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농지개혁을 하기 전에 적지 않은 지주들은 땅을 팔았고, 일부 농민들도 토지 대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거나 분배받은 땅을 다시 팔기도 하였다. (두산동아 276)</u></p> <p>탐구 활동 3. ... 남한과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한 법이다. ... (두산동아 277)</p> <p>사진 설명: 북한의 토지 개혁 – <u>조선 총독부 및 일 본인 소유지, 친일 세력과 5정보 이상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천재 311)</u></p>

	<p>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몰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상 분배에 따른 부담으로 농민이 <u>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u>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몰락하였다. <i>(미래엔 314)</i></p>
--	---

공산화였던 북한의 토지분배는 성공적인 것이고 가장 성공적 세계사적 예가 되는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우리 교과서는 서술하고 있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농민대중을 무마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철저히 실패한 토지개혁이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지개혁으로 한국사회에는 봉건적 소작제도와 지주계급이 근본적으로 해체되었으며 지주계급이 한국사회에서 기득권 계급으로 남아있지 못하였다. 농지개혁으로 소작지였던 전체 농지개혁 대상 농지 151만 정보중 45%인 68만정보는 토지개혁전에, 그리고 나머지 35.8%인 54만정보는 토지개혁을 통해 총 대상토지의 81%가 경작자에게 돌아갔다. 공산화를 전제로 한 국가가 아니면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혁명적’ 토지개혁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교과서는 공산주의식 무상분배가 아닌 유상분배였기에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못해 이뤄진 농지개혁이었고, 결국 잘못되었고 실패했다고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토지개혁도 아닌 토지소유권의 박탈이자 공산화였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비판 없는 긍정이다. 개인소유권 박탈을 통한 전체주의 체제를 만드는 소비에트화(Sovietization)를 농지개혁이라 말하고 대대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묘사하면서 거꾸로 성공한 한국의 농지개혁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서술방식이다.

6. 6.25(한국) 전쟁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1950~53년에 있었던 세계사적이고도 민족사적인 6.25전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있다. 소련과 중국, 북한 등의 공산주의체제가 자행한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침략으로, 전체주의와 제국주의의 확장전쟁이란 사실 인식을 전혀 할 수 없게 서술해놓고 있다. 나아가 침략 주체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 침략전쟁의 성격을 전혀 서술하지 않고 상호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는 양비론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비록 우리 교과서

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침략했다는 논리까지 차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내용은 북한의 역사인식을 옮겨 놓고 있다. 북한의 침략으로 저질러진 수백만 우리 민족의 희생과 인민군이 자행한 대량 학살,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불가능해진 통일이나 중국에 의한 우리민족의 희생에 대한 일체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미제와 이승만정권은 1949년 한해 동안에만도 <u>38도선에서 무려 2,617차례의 무장침습을 감행하였다.</u> ... 이 지역들에 대한 무력침범은 그 치열성과 규모에 있어서나 전선의 넓이에 있어서 사실상의 전쟁도발행위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방출판물들은 후에 그것을 <u>38도선에서의 <작은 전쟁></u>이라고 불렀다. (251)</p> <p>이와 같이 1949년에 38도선에서는 미제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를 공격하는 <u><작은 전쟁></u>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 (253)</p>	<p>남북은 각각 북진 통일과 적화 통일을 내세우며 <u>웅진 반도를 비롯한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을 빚고 있었다.</u> ... (미래엔 316)</p> <p>남북한 정부는 군대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u>38선 일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u> ... (두산동아 278)</p> <p>자료로 보는 역사 : <u>38도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일어나다</u> (두산동아 278)</p> <p>... <u>38도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u> (천재 312)</p> <p>남한과 북한의 대립은 38도선 부근에서의 잦은 무력 충돌로 나타났다. ... (비상교육 354)</p> <p>탐구활동 자료: 6·25 전쟁의 증언 ... <u>동기로 본다면 인민 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u> ... (미래엔 317)</p> <p>남과 북에 수립된 양측 정부는 각기 자신이 <u>권력을 장악한 지역을 토대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u> (천재 312)</p>

북한의 역사서가 제시한 ‘작은 전쟁론’을 통해 그들이 저지른 전면 침략전쟁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북한은 분단 이후 남한이 일으킨 <작은 전쟁>이 수없이 발생하였고 그것은 사실상의 ‘전쟁도발 행위’라고 강변해왔다. 명백한 전면 침략전쟁을 앞에 두고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누가 불법적 전면

적 침략전쟁을 했느냐는 것을 묻지 말자는 논리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집요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사실상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한국전쟁은 크기나 규모만 다를뿐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교과서는 이런 김일성주의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남북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강조했고, 또 ‘하루가 멀다하고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고 반복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검증도 없이 마치 객관적 제3자적 서술인 것처럼 “동기로 본다면 인민 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미래엔 317)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김일성주의와 공산주의에 의해 도발되고 희생당한 민족사적 비극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역사 교과서는 단지 북한 전체주의 교과서의 한국판인 이유가 이런 것이다.

7. 미국과 냉전체제

북한의 역사서는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를 제국주의국가와 식민지 관계로 보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예속(隸屬)국가라고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과서는 이런 역사서술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미국에 대한 기술은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왜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목적이 있었다는 데 그치지 않고, 농산물 원조도 과잉 농산물 내지 잉여 농산물을 제공한 것이고, 그것도 미국 내 농업공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미제는 전후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책동의 한고리로서 ...</p> <p>그들의 침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원조>를 더욱 중요한 침해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미국독점자본을 끌어들여 남조선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453)</p>	<p>...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다. 그 결과 농촌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되었다. ... (비상교육 359)</p> <p>부산항에서 원조 물자를 내리는 모습: 미국의 원조는 ... 미국 내 누적된 잉여 생산물을 처리하여 만성적인 농업 공황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비상교육 359)</p>

<p>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그 대부분이 국방군 무장과 군사시설에 돌려졌고 나머지는 미국과잉상품을 끌어들이는 데 돌려졌다. ... (454)</p> <p>전후 날로 강화되는 미제의 식민지예속정책과 이승만일당의 매국배족 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었으며 ... (456)</p>	<p>... 한국 정부는 생산재를 희망했지만, 미국은 잉여 농산물을 제공하였다. 이에 잉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했으나, 철강과 기계 등 생산재 산업의 성장은 저조하였다.... (미래엔 321)</p> <p>한국사 백과: 무상 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의 원조 농산물은 국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보리와 밀, 면화 등이 가격 경쟁에 밀려 우리 농촌에 점차 사라져 갔다. (미래엔 321)</p> <p>생각 넓히기: 원조 경제가 끼친 영향은? ... 원조 정책에는 인도주의적인 목적과 함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었다. ... 독일의 경우에 비해 한국은 농산물 원조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농산물로 국내 곡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촌 경제는 어려움에 빠졌다. ... (두산동아 284)</p> <p>생각넓히기 ... 미국의 원조는 자국에서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고, 원조국에 대한 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였다. (천재 316)</p>
--	---

사실상 미국의 원조는 전후 복구와 이후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1960년대 미국의 원조량은 한국 총생산량의 9%대에 달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모든 외국인 투자액의 2/3를 차지했으며 우리 수출의 50%이상이 대미 수출이었다. 1971년까지 126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했다. 그럼에도 우리 교과서는 미국에 대해 악의적 반미주의를 목표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도 잉여 농산물 내지 과잉 생산물을 제공(미래엔 321, 천재 316)했다거나 농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비상교육 359, 두산동아 284)고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교과서는 <냉전이 전개되다>와 같은 소재목 하에 동유럽, 그리스, 터키 등

에서 계속된 소련 전체주의의 팽창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강화나 미국 내지 서방측의 견제가 선행되었고, 그에 대한 소련의 대응이 있었던 것처럼 서술해, 냉전이 미국의 위협 때문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그림이나 생각넓히기 등 참고 내용을 통해 스탈린과 트루먼, 스탈린과 매카시 등을 함께 제시하며 양비론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미국에 반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의의나 대한민국 60여년사를 함께한 미국과 미군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8. 이승만대통령과 김일성

우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자 민족사 최초로 자유민주체제와 민주공화제 시대를 만드는데 기여한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이 일절 서술되지 않고 있다. 봉건제와 식민제를 넘어 공산 전체주의와 대결하며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시작한 이승만대통령과 정부는 ‘정권 연장’을 꾀하고 ‘탄압’을 자행했으며,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 때부터 문제(혼란과 혼선)를 불러일으킨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전세계 역사교과서에서 건국 대통령이 한국처럼 서술된 나라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한 나라의 성공한 길을 열어간 지도자에 대해 역사교과서가 사실 왜곡적 비난을 천편일률적으로 감행한 역시 그 예를 찾기 어렵다.

반면 김일성은 민족지도자나 국가지도자로서의 업적이자 자질이 전혀 없었고 단지 소련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교과서는 그런 설명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내각 수상이 되었고, 김일성 주도로 ‘토지개혁’ 등 개혁조치와 ‘민족반역자’ 처벌 등의 민족적 조치를 추진한 것은 물론 김구, 김규식 등과 ‘통일정부 수립’을 향한 노력을 끝까지 수행한 인물로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민족을 유린하고 문명을 파괴한 독재자를 이렇게까지 미화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교과서의 방향이 반대한민국적인 것은 물론이고 헌법적 근거나, 인류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미제는 이것으로도 마음 안놓여 <u>저들의 오랜 친구인 이승만을</u> 급히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이고 반동의 주축으로 삼았다. (175)</p> <p>미제와 이승만정권은 남조선정권을 조작한 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 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 (240)</p> <p>... 이승만의 추악한 매국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정치경제적 위기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었다. (452)</p> <p>이승만정권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대중을 무마하기 위하여 실시한 <농지개혁>은 오히려 큰 후과를 남기고 남조선인민들을 견잡을 수 없는 파산을 몰아넣었다. ... <분배>받은 토지까지 지주와 부농에게 도로 빼앗기게 되었다. ... (454)</p> <p>조봉암을 당수로 하는 진보당은 반제, 반파쇼,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 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정책과 파쇼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다. ...</p> <p>겁을 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유혈적인 탄압책동을 벌여 수많은 진보당 당원들을 체포투옥하고 그 당수 조봉암을 학살하는 아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 (457)</p>	<p><u>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앞세워 정권 연장에 힘썼다.</u> ... (비상교육 358)</p> <p><u>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며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u> 이로 인해 당시 <u>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이 탄압받기도 하였다.</u> (비상교육 389)</p> <p>이승만, 장기 독재 체제를 추구하다 ... 이승만 정부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하여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 (미래엔 320)</p> <p>... 특히 남북의 두 지도자 <u>이승만과 김일성은 적개심과 공포심을 부추겨 자신들의 장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u> (미래엔 352)</p> <p>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전후 복구 ... 이승만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장기 집권을 하였을까? 개헌과 이승만의 장기 집권 (천재 315)</p> <p><u>이승만 정부, 장기 집권을 꾀하다</u> (두산동아 290)</p> <p>역사 퍼즐 가로 열쇠 2.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우자는 이승만의 주장 oo 발언</p> <p>9. <u>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 6·25 전쟁 중에 만든 정당</u></p>

	<p>남산의 이승만 동상 1950년대 아시아 최고 높이를 자랑하였다. <i>(미래엔 320)</i></p> <p>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민 대표 회의 이후 <u>이승만의 탄핵</u>, 자금난과 인력의 부족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 <i>(두산동아 244)</i></p> <p>재미 한족 연합 위원회가 임시 정부에 자금을 송금하고 보낸 전보—</p> <p>... 이승만박사의 동지회는 1943년 12월 23일에 재미 한족연합위원회에서 탈퇴하였으며 정신적·재정적·정치적으로 적지 아니한 혼란과 곤란을 일으켰습니다. 1944년 1월부터 본 위원회는 이승만 씨에 대한 일체 원조를 단절하였으므로 워싱턴 외교 위원부는 임시 정부로부터 새로운 조직이 있기 전까지는 본 위원회는 그 후원을 정지합니다. <i>(미래엔 299)</i></p>
--	--

북한 역사서의 서술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미제의 주구’로 ‘정권을 조작’하고 ‘매국’을 일삼으며 ‘파쇼’와 ‘독재’정치를 만든 장본인으로 기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파쇼적 법질서’를 강요하고 ‘탄압’하였으며 ‘초보적 민주주의’도 아니라는 비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 교과서도 북한 역사서 못지않게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을 ‘장기집권’, ‘독재정치’, ‘부정부패’ ‘민중요구에 소극 대처’ 그리고 ‘권력 독점’ 등의 범주 안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구한말부터 시작, 장기간에 걸친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사실이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우리 민족 최초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은 없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상황에서 ‘공산 전체주의’와 맞서야 했던 상황을 “반공을 앞세워 정권 연장에 힘썼다” (비상교육 358)거나 “적개심과 공포심을 부추겨 자신들의 장기 독재체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50년대 아시아 최고 높이를 자랑하였다”(미래엔 320)면서 이승만의 동상을 김일성의 위상화와 같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민 대표 회의 이후 탄핵(두산동아 244)되었다거나 혼란과 곤란을 일으켰다면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할 수 있는 내용(미래엔 299)으로 채워 넣고 있다.

- 김일성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김일성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185) 김일성은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운 다음 곧 인민민주주의적 개혁으로 정당과 인민정권기관들, 전체 인민을 총동원시켰다. (187)</p> <p>첫 민주개혁으로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 (187)</p> <p>토지개혁법령은 ... 토지의 몰수 및 분배 원칙을 규정하였는데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일제의 소유토지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지 및 5정보 이상을 가진 지주의 토지, 계속 소작을 주고 있던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의 소유로 한다. (188)</p> <p>그는 회의후에 남조선에 나가 자기의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싸우다가 1949년 6월에 이승만이 밀파한 육군소위 안두희에게 피살되었다.... (226)</p> <p>남북연석회의를 통하여 남북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은 더욱 튼튼히 결속되었으며 김일성의 영도밑에 망국단선을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구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였다. (226)</p> <p>역사적인 남북총선거에 기초하여 1948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회의가 소집되었다.</p> <p>김일성은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추대되었으며,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 (231)</p>	<p>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실질적인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이 진행되었다. 임시 인민위원회는 친일 민족 반역자 및 지주의 5정보 초과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1946.3). (미래엔 315)</p> <p>남북협상의 추진</p> <p>...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서고 김구가 암살되면서 남북 협상은 실패하였다.(비상교육 350)...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남북이 분단될 위기에 처하자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중도 세력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일성에게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남북 협상)을 제안하였다. ... (비상교육 350)</p> <p>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 김두봉 등과 함께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해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1948.4)...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김구가 암살되고(1949.6), 막을 내렸다. (미래엔 311)</p> <p>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8월 25일 이북 지역에서 최고 인민 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9월 제1차 최고 인민 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이 제정되고,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곧이어 9월 9일 내각이 구성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 (천재 311)</p> <p>김일성 1인 체제의 형성</p> <p>... 김일성은 북한의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 소련과의 사이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였다. (천재 318)</p>

북한의 역사서는 일제 무장투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적 사건의 중심에 김일성을 두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교과서가 이러한 북한의 역사 서술을 전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양비론을 전개하거나 완화된 표현을 사용해 서술하고 있다. 김구가 암살되지 않았으면, 김일성이 통일정부 수립에 협조했었을 것처럼 기술하는 것이나 극도의 독재체제를 유일 지배체제라는 주체사상식 표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예들의 하나다. 북한은 이미 남북협상이 이뤄지기 전에 정권이 수립되어 있었고, 1차 최고 인민 회의 때 제정되었다는 헌법 또한 소련의 스탈린의 초안을 토대로 소련군정 관리들이 준 것을 번역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주체’라는 것이 단지 구호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소련의 해체로 지원이 중단되기까지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받아 왔던 점을 외면하고, 주체를 강조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주체사상에 대해서조차 우리 교과서는 대체적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만 문제제기하고 있다. 개인숭배적 유일사상체제로 온 민족을 세뇌시키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다. 심지어 교과서는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표방하며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비상교육 386)고 비판 없이 개인숭배적 시각을 그대로 전달하여 소개하고 있다.

9. 남북한의 경제번영에 대한 기술

북한의 역사서는 세계사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번영을 구가한 한국의 경제를 파탄상태로 제시하며, 그와 같은 결과가 미국과 일본에의 종속경제, 예측경제와 그에 복무하는 재벌 중심의 독점 자본주의적 경제 때문이라고 호도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이 제시한 방침과 지도력에 따라 훌륭하게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조기에 초과 달성되어 인민들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 서술은 우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물론 한국의 경제성장을 부정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 경제의 발전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세계사적인 성공적 업적을 서술하기 보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한국경제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쓰는 ‘독점자본’과 ‘재벌’이란 용어를 반복해 사용하고 있으며, ‘의존’이란 표현을 수도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어떻게든 방법이든 성공한 한국 경제도 ‘의존’, ‘종속’경제로 인식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높게 평가하는 세계수준의 한국 대기업을 문제 삼으며 ‘문어발식 경영’이나 ‘족

벌경영’ 등을 언급한다거나 재벌 기업의 성장은 대부분 정경유착에 따른 것이었다고 표현한다. 우리 경제를 ‘불균형’, ‘지나친 재벌중심’, ‘정경 유착’ 그리고 ‘민주화가 필요한’ 경제체제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역사서술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당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쿠바위기를 보며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를 느끼고 경제와 국방 건설을 함께 추진하였다”거나 “군사력 경쟁이 남북한의 경제에 걸림돌이 되었다”(두산 282)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된 ‘새마을운동’의 의의보다는 북한의 천리마 운동 포스터를 제시하고 북한의 서술 그대로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수준이다.(비상 360, 365-6)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p>〈적산〉이라는 명목밑에 약탈한 재산의 일부를 그들에게 아부하는 자본가, 투기업가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고 그들에게 미국잉여상품의 도매와 무역에서의 특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예측자본가의 집단을 만들어 냈다. (219)</p> <p>남조선경제의 파국적 위기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열악되었다. …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가림잡세와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채무노예로 굴러 떨어졌다 (455~6)</p> <p>김일성은...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데 대한 전형적 방침을 제시 … 〈... 특히 원수들의 침략 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 ...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조국보위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에 큰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389)</p> <p>미제국주의자들의 우심해지는[더욱 심해지는]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 정세가 전례없이 긴장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력강화에 더 큰 힘을 넣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 7개년 계획을 3년 동안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398)</p>	<p>기업 중 일부는 원조 물자로 원료를 조달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후 오늘날 재벌로 성장하였다. (두산 276)</p> <p>그 과정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 관계는 심화되었다.</p> <p>귀속 재산과 원조 물자를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이 편중되면서 정경 유착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래엔 321)</p> <p>고도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강력한 저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초고속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미래엔 340)</p> <p>특혜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인들을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흥을 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사면되었다. (미래엔 340)</p>

천리마운동은 전후시기에 이루어진 위대한 사회적 변혁과 물질적 및 정신적 역량에 기초하여 일어난 합법칙적 현상이었다. (364-374)

- 초기 독점 자본의 형성

귀속 재산 불하, 원조 물자 집중 배당,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바탕으로 점차 제분, 제당, 방직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대기업(재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경 유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비상 359)

경제성장 과정의 문제점 (비상 377)

자본주의 경제 제도로 점차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생산재에서 원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안게 되었다. (두산동아 284)

북한은 당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쿠바 위기를 보며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를 느끼고 경제와 국방 건설을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과중한 국방비 부담과 소련의 원조 삭감으로 경제 건설은 지체되었다. ... 대외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은 한계를 보였다. (천재 329)

남북한은 군사력 경쟁을 벌이며 상대의 위협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군사력 경쟁은 남북한 모두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두산동아 282)

북한은 전쟁이 끝나자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1956년 공업 생산이 1949년에 비해 1.8배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북한은 1957년부터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두산동아 286)

	<p>새마을 운동을 벌여 ... 정부가 앞장서서 벌였기 때문에 근대화 물결에 희생되는 농민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두산 309)</p> <p>천리마 운동 포스터 (천재 319, 비상 360)</p>
--	---

Ⅲ. 결론

대한민국을 짓밟고 전체주의를 미화한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목적은 제한된 지면의 서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의 틀과 내용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보편적 가치와 헌법 및 대한민국적 가치 기준에 따른 공통 기본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동체의 과거를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첫째, 대한민국 정통 역사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미워하도록 만들며, 둘째, 김일성·김정일 전체주의를 미화시키며, 셋째 미국을 적대시하는 반미주의를 고양하고 넷째, 국제관계와 세계적 흐름을 차단하고 폐쇄적 반기업적 인식을 형성시키도록 만드는데 봉헌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기본 틀을 함께 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가 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고, 왜 그런 방식으로 서술되었는가를 보면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전사〉 〈조선통사〉 및 〈현대조선역사〉 등의 북한 전체주의 사관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깊게 드리워져 지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김일성주의에 의한 역사서술체계가 한국 역사서술과 교과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반체제, 반정부 저항사 중심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둔갑되었으며, 전체주의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선전 논리가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 함의나 건국과 성장과정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건국 이후 민주공화제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도입과 정착, 기본권의 향상, 각종 제도의 발전과 세계사적 경제번영체제의 형성 등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서사시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세계 모든 역사교과서든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근대적이고 국민의 삶에 기여한 제도와 체제의 형성과정을 기록하고, 각종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기본권의 향상, 제도의 발전,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자기 국가와 국민이 세계사에 기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United States History, 高校 日本史 外).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는 그러한 성취의 기록 대신에 전체주의를 미화시키고 민족과 자유, 민주에 반하는 체제와 세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보편가치에 반하면서도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것들만을 기록하며 각종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등 반민족과 반민주 전체주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혀 할 수 없게 하거나 거꾸로 미화시키는데 역사교과서가 헌정되어 있다. 한국 교과서는 김일성에 대해 북한식의 개인숭배사로 점철된 반면 이승만, 박정희 등 정치지도자에 대해 개인적 의도에 의한 악행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숭배사(崇拜史)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난사(非難史)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수만 개의 동상과 흉상을 세우는 등 우상화 작업을 했는데, 그런 서술은 없이 오히려 이승만과 관련하여 1950년대 아시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이승만동상이 있었다는 교과서술을 감행하는 식이다. 김일성-김정일은 유일지배라는 식으로 표현하며 “남한에서 유신 체제가 성립될 무렵”에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수립되었다는 식(미래엔 320)이거나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협동 농장을 조직”(비상교육 360)했다는 등이 그것이다.

물론 북한 김일성전체주의체제의 역사서는 아직 보편 학문으로 존재할 수 없다. “북한의 역사 서술은 변화의 궤적을 따라가는 역사책이 아니라 영생불멸의 것만을 강조하는 종교적 교리책”(정두희, 240)일 뿐이다. 김일성 체제의 역사서에는 민족의 삶도, 인민의 삶도 나타나 있지 않고 김일성 가문에 창출했다는 ‘업적사’일 뿐이다. 사이비 교리처럼 외부세계와 차단된 주민들로 하여금 전체주의자 김일성 가계를 숭배하도록 세뇌시키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 또한 북한의 역사서는 단지 김일성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허구적 사실을 왜곡된 역사적 사실들과 함께 나열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한국 역사학계는 잘못된 북한의 역사서술 목적이나 관점,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작업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김일성주의적 역사서술체계를 따라 배우고 그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는 보편가치적 기준과 대한민국 헌법체제에 의거한 교과서가 아니다. 역사 연구의 업적과 결과에 따른 학문적 성과에 기반한 역사서도 아니다. 연구도, 사실도 없이 칼과 가위만을 들고 북한의 전체주의 역사체계를 오려 붙였을 뿐이다.(김일영, 164) 극복하고 변화시켜야 할 전체주의 김일성체제의 사관과 왜곡된 사실 서술을 갖다놓고 옮겨 적은 것이다.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 교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의 역사서의 표절(剽竊)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김일성 전체주의에 영향 받고 북한의 역사서술

체제와 시각에 영향 받은 학자군(群)에 의해 변형을 거듭하는 수준이다. 이제 고등학생에게 교육되어야 할 한국사는 북한 전체주의 역사관과 서술체제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문명사와 자유민주적 가치 및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시각에 입각하여 처음부터 다시 정립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끝)

【 참고 문헌 】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

- 도면희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3.
- 한철호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미래엔, 2013.
- 주진오 외 8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3.
- 왕현종 외 6인,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2013.

북한 김일성체제 역사서

- 김한길, 〈현대 조선역사〉, 일송정, 1983.
- 사회과학연구원 역사연구소, 〈조선 통사 下〉, 오월, 1989

기타 문헌

- 김기조, 38선 분할의 역사, 동산출판사, 1994.
- 정두희, 하나의 역사, 두개의 역사학-개설서로 본 남북한의 역사학, 소나무, 2001.
- 김일영,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두레시대, 2005.
- 안병직,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 이영훈,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과거청산(1945-1948)”, 대구사학 제69집, 2002.
- 류석춘, 김광동, “북한 친일(親日)청산론의 허구와 진실”, 시대정신 제58호, 2013.

[토론]

역사교과서를 지배한 북한전체주의 사관

조영기 고려대 교수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

북한 역사교과서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에서 배제와 부정

이명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 목 차 〉

1. 문제제기
2. 북한 고등중학교 역사과과서 『조선력사』의 구조
3. 북한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
 - (1) 『조선력사』2의 근대사 서술
 - (2) 『조선력사』5의 근대사 서술
 - (3) 『조선력사』6의 근대사 서술
4. 『조선력사』 근대사 서술에서 배제와 부정의 논리

1. 문제제기

우리사회의 주요한 문제의 하나가 ‘갈등’이다.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어느 집단에 서든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바로 이 통제하기 어려운 갈등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상대의 존재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정하거나 배제하려 할 때는 나타나는 갈등은 해결이 쉽지도 않고, 또 그것을 생산적 에너지로 돌리기도 어렵고, 따라서 수많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회의 통제하기 어려운 갈등 문제의 하나라 ‘역사’ 문제이다. 상대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 근거를 대고 비판하거나 혹은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 반대하는 수준의 문제라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좁힐 수도 있으며 공존의 길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의 의견이나 입장을 알아보지도 않고 ‘부정’하려 하거나 나아가 존재 자체를 ‘배제’하려 한다면, 상대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차이를 좁히거나 공존을 모색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우리사회의 역사 문제 중에는 후자에 속하는 문제가 상당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부정’이나 ‘배제’는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선’ 혹은 ‘절대 참’이라고 여기는 의식이나 자신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로부터 비롯되는 정신현상이라고 한다. 역사인식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에서 ‘친일’이나 ‘독재’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학계에서는 ‘친일’ 혹은 ‘독재’라는 평가가 내려지면, 그것은 부정 혹은 배제의 대상이 돼버린다.

오늘 발표에서는 ‘부정’과 ‘배제’의 문제는 대한민국 한국사학계의 사례로부터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인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로부터 그 사례와 논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통일 이후 북한에서 역사교육을 받은 주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부정’과 ‘배제’의 논리로서 역사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이해하고, 그 현상에 대처하는데도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배제(foreclosure)’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이 처음 도입한 용어라고 한다. 프랑스어의 ‘포르클뤼지옹(forclusion : 저당물의 반환권 상실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캉은 이 용어를 프로이트(S. Freud)가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한 페어베르퐁(verwerfung:거부)과 유사한 뜻으로 사용하였는데, 프로이트는 늑대인간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자아로의 도입’과 ‘자아로부터의 축출’이라는 두 가지 대립기제를 내세웠다. 자크 라캉은 ‘자아로부터의 축출’을 배제 개념으로 보았다. 배제를 프로이트나 라캉과 같이 파악할 때, 신채호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을 근본주의적으로 적용하면 서로 통하게 된다. 즉 나(我)로부터 나 아닌 것(非我)을 축출하는 것이 곧 역사라고 좁게 정의해버리면 ‘배제’의 논리가 성립된다.

부정(否定)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나 그러한 양태를 성립시키지 않게 하려는 의지” 혹은 “어떤 판단이나 명제를 거짓이라 하는 이성적 행위”로 본다. 여하튼 “해당 규정이 해당 대상에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부정은 긍정적 조정에 이르기 위한 단계로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혹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에서 배제는 역사서술의 내용 선정에서 작용하며, 부정은 평가 혹은 해석에서 행해진다. 그 논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로인한 갈등은 통제 혹은 조정이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북한 고등중학교의 역사교과서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에서 배제와 부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북한 고등중학교 역사과과서 『조선력사』의 구조

북한의 고등중학교는 6년과정으로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된다. 2013년의 학제 개편으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구분되었지만,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교과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본 발표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고등중학교의 역사교과서인 『조선력사』이다. 한 학년에 1권씩, 6개년에 걸쳐 제1권부터 제6권까지를 배우도록 되어 있다. 주체91년, 즉 2002년에 교육도서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을 검토하였다. 각 권별로 집필자가 1명씩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집단 작업의 결과는 아닌 듯하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차원에서 공인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조선력사』는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권과 제2권으로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제3권~제6권으로서 “높은 수준에서 체계적인 력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과 제2권은 역사상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나 훌륭한 문화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로부터 6.10만세운동까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3권~제6권은 고대, 중세, 근대의 3분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체계적인 력사’로 보고 있는 듯하다. 고대는 원시사회로부터 발해와 후기신라까지로서 제3권에서 다루고 있으며, 중세는 고려와 조선으로 제4권과 5권에서 각각 다루고, 그리고 근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일제시대를 제6권에서 다루고 있다.

『조선력사』 제1권은 학사 리인형이 집필하였는데, 우리 민족의 고대사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강조이고, 다른 하나는 ‘가지가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강조이다. 고조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고대의 인물들과 발달했던 문화를 자랑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제2권은 박사 리태영이 집필하였는데, ‘첫 통일국가’를 세운 왕건¹⁾으로부터 6.10만세운동까지를 34개의 과로 구성하고 있다. 주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특히 몽골, 일본, 미국 등의 외세가 옛날부터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해왔으며, 인민들은 어떻게 싸워왔는가 그리고 자기, 화약, 금속활자, 훈민정음, 거북선 등을 어떻게 발명하고 만들었는가를 이야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3권은 학사 오영진이 집필하였는데, 원시사회로부터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와 발해까지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각 국가들이 언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종말 되었는가 그

1) 대한민국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최초의 민족통일로 보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역사교과서는 고려를 첫 통일국가로 취급하고 있다.

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과 사실들이 있었고, 특히 어떤 자랑스러운 것들을 만들어 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제4권은 학사 한영찬이 집필하였는데,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 통일국가’로 평가하는 고려시기의 역사를 투쟁과 창조의 역사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인민들이 외래 침략자들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나라의 위력과 민족의 슬기를 떨치는 모습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5권은 학사 제갈명이 집필하였는데, ‘우리나라 봉건시기 마지막 왕조’인 리조 봉건 국가의 역사를 다루는데 투쟁과 창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선의 통치제도와 경제·문화를 설명한 후, 16세기 일본의 침략과 19세기 후반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의 침략자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6권은 제1권을 집필한 학사 리인형이 집필하였는데, 1905년 ‘일제의 조선 강점’에서부터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과 1930년의 단천 농민운동까지를 서술하는 한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문화사와 풍습을 설명하고 있다. 제5권이 95쪽인데 비하여 제6권은 40쪽으로서 매우 간략하다. 특히 3.1운동을 실패한 운동으로 평가하면서, 일제의 ‘문화통치’를 매우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이에 부응하여 일어난 부르조아 민족 운동의 쇠퇴·몰락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선력사』는 공통적으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 역사에서 자기 정체성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서술에서 내용 선정 여부와 서술 내용에 대한 가장 큰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 혹은 주체성은 “끊임없이 달려드는 외세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영예롭게 지켜”낸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역사와 함께 “뛰어난 지혜와 재능으로 세계적인 발명을 하고 귀중한 자료”를 만들어낸 자랑스런 문화로부터 찾고 있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맞서 능동적으로 투쟁하고 또 공산주의 운동도 전개하였지만, 결국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여 실패하였다고 평가함으로써, 근대사 전체를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위한 전주곡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바로 『조선력사』의 의의를 여기에 두고 서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북한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

『조선력사』 6권 중에서 근대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래의 제2권, 제5권, 제6권이다. 이들 각 권의 근대사 서술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조선력사』2의 근대사 서술

제2권의 제21과는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이다. “제22과 대동강에 처박힌 〈서면〉호”부터 “제34과 6.10만세시위투쟁”까지가 근대사 관련 서술이다. 그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고등중학교 『조선력사』2의 근대사 서술 분석

과의 주제	주요 내용	비고
제22과 대동강에 처박힌 〈서면〉호	미제국주의의 대동강 침입↔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의 격퇴	긍정-미제 침략 격퇴(김응우)
제23과 남연군의 무덤을 파헤치려던 해적의 무리	미제국주의의 남연군묘 약탈만행↔호미와 갱이를 든 인민들의 견결한 항의로 실패	긍정-미제침략 격퇴(가야동인민)
제24과 〈운양〉호의 도발사건	미국의 원조 하에 일본의 조선침략↔민비의 노골적인 투항 행위로 침략적 불평등조약 체결	부정-불평등조약체결(민비)
제25과 임오년의 군인폭동	구식군인들의 일본공사관 및 창덕궁 공격↔일본공사 및 민비의 도망	긍정-군인들의 침략세력 응징
제26과 김옥균과 갑신정변	김옥균의 무장 정변↔수구파 관리 처단 및 혁신정강 발표, 인민 대신 궁정내부세력 의거	긍정-근대개혁 부정-인민불신
제27과 애국에 피를 바친 전봉준	전라도 농민의 갑오농민전쟁↔봉건통치세력+일본 침략세력	긍정-폐정개혁 추진
제28과 〈민비살해사건〉	일제강도무리의 민비 살해↔을미의병	부정-강도적 학살만행
제29과 강제로 꾸며낸 〈을사 5조약〉	일본의 무력동원으로 국왕과 조정 위협↔5개조항체결, 조선의 보호국화	부정-을사오적 긍정-고종 거부
제30과 돌아오지 않은 밀사	리준, 이상설, 이위종의 만국평화회의 파견↔일본, 미국, 영국의 방해	긍정-조선강점의 비법성 폭로

제31과 애국렬사 안중근	안중근, 할빈역에서 이등박문 격살 및 독립만세→몇몇 원썬놈들 처단으로는 나라 독립 불가	긍정-조선사람 기개 과시
제32과 반일의병대장 홍범도	홍범도의 산수, 갑산, 후지령 전투↔40여차례 전투로 일본침략자들에게 큰 타격	긍정-일제 강점에 반대한 인민의의지
제33과 3.1인민봉기	우리민족의 전민족적 투쟁, 8세 김일성 보통문앞 시위 참가↔일제의 무력 탄압,	긍정-애국심 과시
제34과 6.10만세시위투쟁	조선공산당의 반일시위투쟁 지도↔경찰과 군대 동원하여 진압	긍정-일제 타격

위 13개과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침략과 그에 대한 항쟁이 2개, 일본의 침략과 그에 대한 항쟁이 8개, 그리고 국내의 정치에 대한 봉기 혹은 개혁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의 주된 내용이 외세를 배격하기 위해 투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거나 혁명적인 개혁을 한 내용이다. 내부적 봉기도 외세에 대한 저항의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북한이 기대하는 인간상이 ‘외세에 저항하는 인민’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며, 교과서 서술에도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북한 교과서의 내용구성은 반외세 민족운동사 중심의 내용구성을 극단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 기본 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교과서의 이 시기 서술도 반외세 민족운동 중심의 서술을 하고 있다.

『조선력사』 2는 형식상으로 시대구분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준을 적용하면 조선의 근대는 미제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고 있다. 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약탈에 장렬하게 투쟁함으로써 미제를 자랑스럽게 물리치는 것으로 근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사건도 미제의 약탈·만행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²⁾ 일제의 침략에 대한 저항도 폭력적인 저항이나 공격이 강조되며, 기개나 의지 등을 과시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의 모순에 대항하여 일어난 폭동이나 폭력적 개혁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임오군란에 대해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인민들은 일제놈과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 일어나셨습니다.”(72쪽)라고 서술하고 나아가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국가에

2) 오페르트는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인이다. 정확히 말하면 독일계 유대인으로서 상인이다. 그는 당시까지 쇄국을 고수하고 있던 조선과 통상의 길을 열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상하이로 떠나 충청도 해미(海美)에 와서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돌아갔다. 그는 1868년 4월에 다시 미국인 모험가 쟁킨스(Frederick Henry Barry Jenkins)를 자본주로 하고, 프랑스 선교사 스타니슬라스 페롱(Stanislas Féron)을 통역관 겸 보좌관으로 대동하여 차이나호(號)에 백인 8명, 말레이시아인 20명, 조선 천주교도 몇명, 청국인 승무원 약 100여 명을 태우고 상하이로 떠나 한국에 이르러 홍주(洪州)의 행담도(行擔島)에 정박하였다. 따라서 도굴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미국이라기 보다는 다국적 모험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서 군대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군의 무장봉기를 긍정하는 동시에, 군대에 대한 대우를 강조하고 있다. 이점은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군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또한 갑신정변에 대해 “김옥균의 지도밑에 개화파는 무장 정변준비를 다그쳤습니다.”라고 ‘폭력혁명’임을 부각하면서, “우리나라를 한걸음 더 발전시켜 침략자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였습니다.”(76쪽)라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서술들에 군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폭력’을 긍정하고 ‘봉기’를 찬양함으로써 투쟁적 심성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2) 『조선력사』5의 근대사 서술

제5권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4장 외래 자본주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과 “제5장 갑신정변, 1894년 농민전쟁과 부르조아 개혁”이 근대사 관련 서술이다. 그 세부 목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4장 외래 자본주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1절 대원군의 《개혁》과 쇄국정책

1. 대원군의 집권과 나라 형편
2. 대원군의 《개혁》정책
3. 대원군의 쇄국정책

제2절 미국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1. 대동강에서 《서면》호 격멸
2. 《쇄난도아》호와 《차이나》호의 격퇴
3. 1871년 《신민양요》

제3절 프랑스 침략자들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제4절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1. 민비일파의 정권장악과 일본의 침략 야망
2. 《운양》호사건
3. 《강화도조약》의 조작
4. 일본군국주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5절 임오군인폭동

1. 외래자본주의 침략의 강화
2. 서울군인들의 생활처지
3. 폭동의 동기 — 군료지불사건
4. 폭동과정과 실패

제5장 갑신정변, 1894년 농민전쟁과 부르조아 개혁

제1절 개화사상의 발생과 개화파의 형성

1. 개화사상의 발생
2. 개화파의 형성
3. 개화파의 초기활동

제2절 갑신정변

1. 정변전 개화파의 개혁활동
2. 갑신정변

제3절 갑오농민전쟁

1. 갑오농민전쟁은 아시아 3대항전의 하나
2. 농민전쟁의 시작
3. 농민군의 연속적 승리, 전주성 점령
4. 일본, 청나라의 무력간섭, 《전주화의》와 집강소
5. 농민전쟁의 재발, 공주대작전
6. 농민전쟁의 역사적 교훈과 의의

제4절 갑오개혁

1. 개혁기운의 성숙
2. 교정청, 군국기무처의 조직과 갑오개혁의 실시
3. 갑오개혁의 파탄

제5권은 근대를 대한민국의 교과서들과 같이 대원군집권기부터 시작하고 있다. 대원군의 세도정치 타파나 경복궁 중건, 그리고 서원철폐 등에 대해서 “세도정치의 후과를 가시고 외래침략세력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막아내는 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었다.”(63쪽)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대하여 “쇄국정책은 결코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책으로 되지 못하였다. 놈들의 침략행위를 견제하면서 한편으로 선진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여 나라의 국력을 키울 대신 나라의 울타리만 둘러막음”(63-64쪽)이라고 하여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적 행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과학기술 등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와 차이나호(오펜트 도굴시 이용한 배)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에 대한

평가는 제2권의 기조와 다름없으며, 프랑스와의 병인양요에 대해서는 조선인민들의 줄기찬 항쟁으로 “반침략투쟁력사를 빛나게 장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운양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는 “일본놈들이 수많은 침략무력을 끌고 들어와 불평등조약을 강요할 때 인민들은 침략자들과 싸울 것을 주장하여 상소를 하고 의용병을 조직하여 강화도로 달려오고 군수물자를 모아 보냈다. 자기들의 투쟁열의가 이처럼 높은데도 《조약》이 끝내 조작되자 인민들은 부산에 있는 왜놈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왜놈 사신단이 지나갈 때는 시위를 벌리었으며 기와장과 돌을 던지며 투쟁을 벌리었다.”(74쪽)라고 하여, 인민들의 투쟁의지와 달리 민씨일파에 의해 강화도 조약은 조작된 것이며, 인민들은 끝까지 투쟁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갑신정변 이전의 개화사상과 개화파의 형성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여 갑신정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갑신정변과 김옥균에 대하여 “갑신정변은 우리나라에서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근대적 발전을 이룩하려고 한 부르조아 개혁이었다. 따라서 이 정변의 조직자인 김옥균은 우리나라를 개혁시키려고 한 부르조아 개혁운동자였고 애국자였다.”(84쪽)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개화파와 갑신정변 그리고 김옥균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갑오농민전쟁, 즉 동학운동에 대해서는 인민들의 투쟁과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 농민군이 올바른 투쟁목표와 방도를 잘 알지 못한 데 있었다. 지방관청과 서울에 쳐들어가서 몇몇 악질 양반 통치배들이나 처없앨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봉건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이 주인 된 새 세상을 세울 것을 목표로 해야 하였다.”라고 평가하는 한편,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일단 투쟁을 시작했으면 계속 진격하여 외래침략세력과 낡은 사회제도자체를 짓부셔 버려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80-81쪽)라고 그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갑오개혁에 대해서는 “1884년 개화파들의 부르조아개혁운동은 봉건 정부안의 혁신관료들에 의하여 이어지고 계속되어 마침내 1894년 갑오개혁을 낳게 하였다.”(91쪽)라고 하여 갑신정변에 이은 근대적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정청과 군국기무처가 추진한 개혁들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분야로 구분하여 표로서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 농민의 절실한 요구인 토지 배분을 하지 못한 점, 사회적 악폐를 근본적으로 일소하지 못한 것을 한계로 지적한다. 그리고 갑오개혁의 실패에 대하여 “조선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안팎의 반동세력은 갑오개혁을 파탄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94쪽)라고 하여 일본과 조선의 봉건 세력의 방해 때문에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그 원흉을 박영효로 지목하고 있다.

(3) 『조선력사』6'의 근대사 서술

제6권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일제의 조선강점, 반일의병투쟁과 애국문화운동”, “제2장 1919년 3.1인민봉기”, “제3장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과 초기공산주의 운동”이다. 그 세부 목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 일제의 조선강점, 반일의병투쟁과 애국문화운동

제1절. 1905년 일제의 조선강점

- 1.
2. 일제의 조선강점과 《조약》 날조

제2절. 반일의병투쟁

1. 반일의병투쟁의 시작과 중단
2. 반일의병투쟁의 재발과 양양
3. 의병부대들의 서울공격시도의 실패와 의병투쟁의 약점
4. 《헤그밀사사건》과 안중근의 이등박문 처단

제3절. 애국문화운동

1. 《독립협회》와 《독립문》 건설
2. 만민공동회 투쟁
3. 《헌정연구회》의 활동
4.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의 활동
5. 《신민회》의 활동
6. 언론출판활동
7. 교육운동
8. 국문운동
9. 《국채보상운동》

제2장. 1919년 3.1인민봉기

제1절.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

제2절. 1910년대 반일독립운동

1. 반일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의 준비
2. 독립운동단체들의 조직과 애국문화운동
3.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투쟁

제3절. 3.1인민봉기

1. 3.1인민봉기의 폭발과 확대발전
2. 일제의 야수적 만행, 3.1인민봉기의 실패

제3장.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과 초기공산주의운동

제1절.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

제2절. 부르췌아민족운동의 쇠퇴

제3절.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과 초기공산주의운동

1.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
2. 초기공산주의운동

제4절. 19세기 후반기—20세기 초의 문화

1. 과학기술
2. 문학과 음악

조선민족의 풍습

- 설명절을 통하여 본 풍습
- 단오명절 풍습
- 추석날의 풍습

『조선력사』 6은 일제의 조선 강점을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으며, 그 큰 배경으로서 ‘가쓰라와 태프트의 밀약’을 들고 있다. “미제는 19세기 말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 왔으며 1905년에는 가쓰라와 태프트의 비밀협약을 체결하고 일제의 조선강점을 도와 주었습니다.”(4쪽)라고 하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미제가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적극 도와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한 일제의 조선 침략에 대항하여 저항한 의병투쟁에 대하여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과는 굴함없이 싸워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애국심이 강한 민족입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민족의 존엄’을 지킨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의병투쟁을 1895년 의병(유인석), 1905년 의병(민종식과 최익현), 1907년 의병(리인연의 서울공격시도) 등으로 시기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그리고 헌정연구회와 대한자강회 및 대한협회 나아가 신민회 등의 활동을 애국문화운동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애국문화운동은 일제의 침략을 막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며 근대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민들을 깨우치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벌어진 운동이다.”라고 규정하면서 평가하는 한편, 이러한 흐름에서 전개된 출판활동, 교육운동, 국문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1910년대의 반일독립운동에 대하여 “망국후 10년동안에 국내에서는 일제의 폭정하에서 비밀결사와 애국문화운동 등으로, 국외에서는 혁명단체들의 조직 또는 반일투쟁으로 민족해방운동은 끊임 없이 전개되었습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제시하고, 채응언과 김정환의 의병활동과 신민회 등의 애국적 지식인들의 준비사업, 중광단과 광복회의 활동, 그리고 신채호와 박은식의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3.1 인민봉기, 즉 3.1운동과 관련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이나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3.1인민봉기의 불길은 먼저 평양과 서울에서 타올랐다. 평양에서는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의 혁명적 영향을 받은 평양숭실중학교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놀았다.”(22쪽)라고 하여 평양에서 3.1운동의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서울의 오후 2시 30분,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군중운동보다 평양의 낮 12시 종소리와 함께 송덕여학교 운동장에서 시작된 독립선언서 낭독이 빨랐으며, 김일성 일가를 따라 수천명의 군중이 징과 북을 울리며 보통문으로 밀려들어가는 모습과 8살의 김일성이 만세를 부르며 보통문 시위에 참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남한의 운동 중에서는 탑골공원 시위와 수원군 송산면 시위 그리고 천안 아우내 장터 시위도 소개하고 있다. 즉 “충청남도 천안군에서 반일봉기의 앞장에서 싸우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된 16살의 녀학생인 류관순은 재판정에서도 재판의 부당성을 견결히 단죄하였으며 감옥안에서도 굴함없이 싸우다가 희생되었다.”(24쪽)라고 류관순의 투쟁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3.1운동의 실패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행위에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운동이 탁월한 수령, 혁명적인 계급과 혁명적인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한데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실패한 다른

하나의 원인은 부르쥬아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제한성과 숭미사대주의에 있었다.”(25쪽)라고 하여, 3.1운동 지도부의 성분과 이념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19세기 중엽부터 계속되어 오던 부르쥬아 민족운동의 시기는 끝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25쪽)라고 역사적 의미부여를 행하고 있다. 즉 갑신정변-갑오경장-애국문화운동으로 이어오던 부르쥬아 민족운동의 역사적 역할은 3.1운동으로 끝났으며, 이후에는 인민들의 대중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이 민족운동의 주력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3.1운동 이후는 일제의 ‘문화통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일제는 ‘문화정치’라고 표현하였고, 대한민국의 교과서도 종전에는 이른바 ‘문화정치’라고 칭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교과서의 용어도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제3장에서는 문화통치에 대해 “조선인민과 세계여론을 속이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허구적 통치 방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기만적 구호 밑에 친일주구들을 굽어모아 식민통치의 기둥으로 삼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 막으며 항일투쟁대오를 안으로부터 허물어버리려고 책동하였다.”(26쪽)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놈들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조선글로 된 신문, 잡지들을 몇종 내게 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는 듯이 하면서 조선인부르쥬아상층을 동원하여 제놈들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찬양하게 하며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자는 것이었다.”(26쪽)고 일제의 문화통치와 함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언론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민족의식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비하하고 있다.

『조선력사』 6은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에 대해 “부르쥬아 민족운동의 쇠퇴”라고 하는 독자적인 절을 설정하여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즉 “3.1인민봉기를 계기로 부르쥬아민족운동은 전면적으로 쇠퇴몰락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것은 독립군운동이 호지부지되었으며 부르쥬아민족운동의 상층분자들이 반일독립운동을 집어치우고 일제의 품속으로 기여 들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매국배족적인 책동을 감행한데서 나타났다.”(27쪽)고 하면서,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 일제와 일정부분 타협하는 모습을 극렬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해외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매국배족적’이라고 매도한다.

다만, 해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도 하는데 “주체8(1919)년 8월 홍범도는 200여명의 독립군을 이끌고 국내에 들어와 갑산, 해산 등지를 오가면서 여러번 일제침략군의 병영을 들이쳤으며 10월에는 강계, 만포 등지를 기습하여 수많은 일제침략군들을 죽ിച്ച었다.”(28쪽)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독립군은 1922년 원동지방에서 벌어진 독립군부대들사이의 류혈무장충돌사건인 <흑하사변>을 계기로 다시 추서지 못하고 독립군운동을 호지부지되고 말았다.”(28쪽)고 하면서, ‘자유시사변’ 이후 민족주의계열의 독립군 활동이 침체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족실력양성운동에 대해서는 “부르쥬아민족운동의 전면적쇠퇴몰락은 다음으로 부르쥬아민족주

의운동의 상층부들 3.1인민봉기후 더욱더 매국배족의 길로 나간데서 나타났다. 한때 자신을 <애국지사>라고 떠들어 대던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일제가 <문화통치>의 간판을 들고 나오자 그에 기대를 걸고 독립운동을 집어 치웠다. 그들은 민족개량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일제의 앞잡이로 굴러 떨어졌다. 민족개량주의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때려 부실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그밑에서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 <민족성을 개량>하며 민족의 <자치>를 실현하면 독립이 저절로 온다고 하는 반동적 부르주아사상이었다.”(28-29쪽)고 하면서, 민족실력양성운동의 개량주의적 성향을 ‘매국배족’으로 평가하면서 그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한편 해외에 있던 부르주아민족운동의 상층부들은 1919년 4월에 중국 상해에서 이른바 <림시정부>라는 것을 꾸며 내고 그 안에서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들을 이루고 권력싸움을 벌리었다. 이와 함께 그들은 큰 나라들에 조선이 독립하게 해달라고 구걸하러 다니는 사대주의망동도 부리었다.”고 하면서 임시정부의 분파적 행위를 비판하면서 그 의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3.1운동 이후 대중운동에 대해서는 “주체9(1920)년 4월에 <조선로동공제회>가, 주체 13(1924)년에는 <조선로농총동맹>이 조직되고 각지에 농민단체로서 <소작인조합>, <농우회>, <농민공제회>가, 청년단체로서는 <조선청년총동맹>이 조직되었다.”(29쪽)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농민들도 주체 13(1924)년 황해도 재령나루터변 농민들의 소작쟁의와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농민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투쟁을 벌리었다.”(30쪽)고 농민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노예교육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30쪽)고 하여 청년들과 학생운동의 성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한계에 대하여 “이처럼 3.1운동후 여러 대중단체들이 조직되고 그에 의하여 많은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졌으나 그것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통일적지도를 받지 못하여 중국적으로 승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대중운동의 장성은 그것을 통일적으로 옹기 지도할 수 있는 당의 출현을 절실히 요구하였다.”(30쪽)고 하여 ‘혁명적 당의 통일적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다고 평가한다.

조선공산당 창건과 관련하여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로동운동이 장성하는 과정에 주체 14(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다. 그러나 초기공산주의운동은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우선 공산주의자들이 대중과 리탈하여 령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면서 실지 혁명투쟁에 대중을 불러 일으키지 않은 것이었다.”(30쪽)고 조선공산당의 저급성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다음으로 그 제한성은 공산주의 운동 안에서 발행한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종파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하에 로동운동이 양양되고 맑

스-레닌주의가 대중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던 때에 부르쵸아지, 소부르쵸아인테리, 몰각한 봉건 귀족, 양반출신인테리들이 맑스-레닌주의간판을 들고 혁명운동대렬에 끼여 들었기때문이었다.”(30 쪽)고 하여, 조선공산당 내의 종파주의의 원인을 그들의 출자에서 찾는한편, 〈화요파〉, 〈서울파〉, 〈엠엘파〉, 〈서상파〉 등을 주요 종파로서 지명하고 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처럼 1920년대초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게된 것은 탁월한 수령이 없었기 때문이었다.”(31쪽)고 하면서 김일성과 같은 영도력의 부재가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실패원인이라고 단정한다.

6.10만세운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교과서들과는 달리 “6.10만세시위투쟁은 3.1인민봉기후 민족해방투쟁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된 대중운동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순종의 장례식날을 계기로 전국적범우에서 반일시위투쟁을 벌리기로 계획하고 그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비밀이 시위투쟁준비위원회에 끼여 있던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일제에게 알려졌다. 반일시위준비위원회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여 당시 공산주의 운동 실패의 원인을 모두 종파주의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산총파업에 대해서는 “주체18(1929)년 1월 원산 노동자들의 총 파업이 벌어졌다. 투쟁은 문평 유조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시작되었다. 원래부터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던 이곳 노동자들은 일제감독놈이 조선 노동자를 때린 사건을 계기로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왜놈 감독놈을 내쫓으며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위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겹을 먹은 일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석달이 지나도록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원산노동조합연합회에 망라된 2,000여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연합회의 지도밑에 1만여명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달이나 완강한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전국의 노동자, 농민들은 곳곳에서 격전, 격문, 동정금을 보냈으며 대표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파업의 규모나 연대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석유회사가 영국인 경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오페르트 사건이 미국인 켄킨스의 자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미제국주의에 의한 약탈과 만행이라고 비판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즉 『조선력사』는 미국과 일본의 제외한 여타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 거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의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며 국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전략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조선력사』 근대사 서술에서 배제와 부정의 논리

이상의 3권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근대사의 서술이 오로지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의 역사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원군의 개혁정책이나 갑신정변 그리고 갑오개혁 등 내부의 개혁조차도 제국주의 침략과의 연계 속에서 서술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배척의 정도가 심하다.

둘째,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의 주체를 ‘인민’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의 영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반외세 투쟁을 하는 인민의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묘사되고 평가되고 있다. 부르쥔아 민족운동 세력이나 의병투쟁을 전개하는 유림들조차도 인민 속에 포함되고 있다.

셋째, 인민들의 노력 중에서도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무장을 통해 폭력적으로 저항한 것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 저항운동은 마치 모두 승리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넷째, 3.1운동 이전까지 전개된 ‘부르쥔아 민족운동’의 흐름, 즉 갑신정변-갑오개혁-애국문화운동-3.1운동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역사를 단계론적으로 보는 맑스주의 사관의 반영이라고 해석된다. 『조선력사』는 3.1운동 이전까지는 부르쥔아 민족운동을 민족운동의 주류로서 보고 일정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3.1운동 이후가 되면 부르쥔아 민족운동에 대한 평가가 일변하여 ‘매국배족’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지역적으로 남한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보다는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을 강조한다. 3.1운동도 서울보다도 평양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김형직이 중심이 된 평양 보통문 시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남한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시위와 관련하여 류관순의 투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섯째, 3.1운동 이후 부르쥔아 민족운동은 전면적으로 쇠퇴·몰락의 길을 걷는 한편, 민족개량주의 노선을 일제의 앞잡이로 평가하고 있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언론활동에 대해서도 민족의식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서술하고 있다.

일곱째, 3.1운동 이후의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은 인민들의 대중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이 독립운동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일제하의 대중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조차도 김일성의 영도 하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혁명성이 떨어지거나 종파주의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요컨대 조선의 혁명은 김일성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이 이상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배제와 부정의 논리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에서 ‘배제’된 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역사서술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서술되고 있는 것 가운데 제외되는 것이 적어도 3가지 있다. 하나는 1976년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서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탈경제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문호개방 이후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 등을 통해 들어온 근대문물과 문화의 보급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이후 국제정세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력사』에서도 근대사 서술의 큰 축이 반제국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나 당시의 국제정세 혹은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검토가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다.

왜, 이상과 같은 배제가 나타나는 것일까? 사회·경제 현상, 근대문물, 국제정세 등은 북한에서 사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금기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일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북한 사회를 허물어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현재, 북한 사회에서 사회·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북한 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친 것일까? 또한 근대문물이나 국제정세에 관심도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위협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에서 ‘부정’되는 것은 무엇일까? 서술은 되고 있지만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는 것들이 적어도 몇 개 있다. 첫째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 역사교과서가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만큼,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부정되고 있다. 둘째는 봉건세력이 부정되고 있다. 고종과 ‘민비’ 그리고 수구적 집권 세력이 부정되고 있다. 이들은 1905년과 1910년을 거치면서 친일세력으로 전환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르주아 민족운동이 3.1운동이전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다가 3.1운동 이후에는 부정되고 있다. 특히 부르주아 민족운동은 일제의 앞잡이를 넘어 ‘매국배족’으로 부정될 뿐 아니라 쇄국·몰락의 길을 걷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대중운동 중에서도 혁명성이 떨어지는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 중에서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독립운동은 부정된다.

이상, 북한의 『조선력사』에서 부정하는 4가지를 명확히 하고나면, 대한민국의 좌파 혹은 친북 성향의 집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력사』 근대사 서술의 특징과 그곳에서 나타나는 ‘배제’와 ‘부정’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금후 북한 『조선력사』의 배제와 부정의 논리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명백히 하는 한편,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북한 『조선력사』에서 부정하는 것들은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내의 좌파 혹은 친북 성향의 운동이나 세력들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리인형 『조선력사』 1, 교육도서출판사, 2002년.
 리태영 『조선력사』 2, 교육도서출판사, 2002년.
 오영진 『조선력사』 3, 교육도서출판사, 2002년.
 한영찬 『조선력사』 4, 교육도서출판사, 2002년.
 제갈명 『조선력사』 5, 교육도서출판사, 2002년.
 리인형 『조선력사』 6, 교육도서출판사, 2002년.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김한길 『현대조선역사』 일송정, 1988년.
 자크 라캉 저 · 맹정현 등 번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 새물결, 2008년.

【 부록 : 고등중학교 『조선력사』(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의 권별 목차 】

● 고등중학교 1	머리말	제15과	헤초의 세계여행
	제1과 우리 땅에 산 첫 사람들	제16과	가야금을 만든 우륵
	제2과 조선민족의 첫 나라를 세운 단군	제17과	이름난 고구려의 무덤벽화
	제3과 강상 무덤에 묻힌 노예들	제18과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옛 모습
	제4과 고조선의 애국 명장 성기	제19과	계백장군의 최후 결전
	제5과 공후인	제20과	조선사람의 지조를 지킨 박재상
	제6과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	제21과	구진천파 천보노
	제7과 한겨레의 나라 백제와 신라	제22과	이름난 화가 솔거
	제8과 고구려의 애국용사 을두지와 뉴유	제23과	세계에서 가장 오랜 천문대
	제9과 <바보온달>이 장군으로	제24과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제10과 명림답부의 지략	제25과	붉은 바지를 입고 싸운 사람들
	제11과 광개토왕릉비가 전하는 이야기	제26과	대조영과 천문령싸움
	제12과 을지문덕장군과 살수싸움	제27과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
	제13과 연개소문장군의 단호한 결심	제28과	발해의 사신 양태사
	제14과 당나라왕을 애꾸로 만든 안시성싸움	제29과	법룡사에 그린 담징의 그림

<p>●고등중학교 2</p>	<p>머리말</p> <p>제1과 첫 통일국가를 세운 왕건</p> <p>제2과 강화담판으로 적들을 물러 가게한 서희 장군</p> <p>제3과 구주 싸움과 강감찬 장군</p> <p>제4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금속활자</p> <p>제5과 천하의 보물 고려자기</p> <p>제6과 공주에서 일어난 망이농민폭동</p> <p>제7과 봉건몽골침략군을 물리친 구주성 방어자들</p> <p>제8과 애국적발명이 최무선</p> <p>제9과 봇대속에 감추어 온 목화씨</p> <p>제10과 왜구의 소굴 쓰시마공격</p> <p>제11과 군사를 돌려세운 리성계의 죄악</p> <p>제12과 세계의 첫 측우기</p> <p>제13과 우리 글자 <훈민정음></p> <p>제14과 함경도농민전쟁과 리시애</p> <p>제15과 리순신장군과 거북선</p> <p>제16과 홍의장군 광재우</p>	<p>제17과 계월향</p> <p>제18과 행주산성싸움</p> <p>제19과 뛰어난 화가 김홍도</p> <p>제20과 홍경래와 평안도농민전쟁</p> <p>제21과 김정호와 대동여지도</p> <p>제22과 대동강에 처박힌 <서면>호</p> <p>제23과 남연군의 무덤을 파헤치려던 해적의 무리</p> <p>제24과 <운양>호의 도발사건</p> <p>제25과 임오년의 군인폭동</p> <p>제26과 김옥균과 갑신정변</p> <p>제27과 애국에 피를 바친 전봉준</p> <p>제28과 <민비살해사건></p> <p>제29과 강제로 꾸며낸 <을사조약></p> <p>제30과 돌아 오지 않은 밀사</p> <p>제31과 애국렬사 안중근</p> <p>제32과 반일의병대장 홍범도</p> <p>제33과 3.1인민봉기</p> <p>제34과 6.10만세시위투쟁</p>
<p>●고등중학교 3</p>	<p>머리말</p> <p>제1장. 원시공동체사회</p> <p>제1절. 원인들의 생활</p> <p>제2절. 고인들의 생활</p> <p>제3절. 신인들의 생활과 조선옛류형사람의 형성</p> <p>제4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p> <p>제2장 노예소유자사회</p> <p>제1절. 고조선</p> <p>제2절. 부여, 구려, 진국</p> <p>제3절. 고대조선사람들의 일본땅에로의 진출</p>	<p>제3장 봉건사회, 첫 봉건국가들</p> <p>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p> <p>제2절. 백제</p> <p>제3절. 신라</p> <p>제4절. 일본땅에 퍼진 세나라의 문화</p> <p>제4장 발해와 후기 신라</p> <p>제1절. 발해</p> <p>제2절. 후기신라</p> <p>제3절. 9세기 농민전쟁과 <후삼국></p>

<p>●고등중학교 4</p>	<p>머리말</p> <p>제1장. 고려의 국토통일과 발전</p> <p>제1절. 고려의 성립과 국토통일</p> <p>제2절. 고려의 통치제도</p> <p>제3절. 고려-거란전쟁</p> <p>제4절. 고려의 경제발전과 북방 진출</p> <p>제2장. 12세기 후반기~13세기 초 대농민전쟁</p>	<p>제1절. 고려의 무신정권</p> <p>제2절. 12세기 후반기~13세기 초 대농민전쟁</p> <p>제3절. 고려-몽골전쟁</p> <p>제4절. 국토완정을 위한 고려인민들의 투쟁</p> <p>제3장. 고려의 종말과 문화</p> <p>제1절. 고려의 종말</p> <p>제2절. 고려의 문화</p>
<p>●고등중학교 5</p>	<p>머리말</p> <p>제1장. 15세기 리조봉건국가의 발전</p> <p>제1절. 봉건통치제도의 강화</p> <p>제2절. 15세기 경제의 발전</p> <p>제3절. 4군6진의 설치와 쓰시마 원정</p> <p>제4절. 1467년 함경도농민전쟁</p> <p>제2장. 임진조국전쟁, 청나라의 침입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p> <p>제1절.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p> <p>제2절. 청나라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p> <p>제3절. 15~16세기의 문화</p> <p>제3장.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평안도 농민전쟁과 1862년 전국농민폭동</p> <p>제1절.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p> <p>제2절. 봉건통치제도의 문란</p> <p>제3절. 1811~1812년 평안도농민 폭동</p>	<p>제4절. 1862년 전국농민폭동</p> <p>제5절. 17~19세기 전반기의 문화</p> <p>제4장. 외래자본주의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p> <p>제1절. 대원군의 《개척》과 쇄국정책</p> <p>제2절. 미국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인민들의 투쟁</p> <p>제3절. 프랑스침략자들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p> <p>제4절.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p> <p>제5절. 임오군인폭동</p> <p>제5장. 갑신정변, 1894년 농민전쟁과 부르조아개혁</p> <p>제1절. 개화사상의 발생과 개화파의 형성</p> <p>제2절. 갑신정변</p> <p>제3절. 갑오농민전쟁</p> <p>제4절. 갑오개혁</p>

●고등중학교 6

머리말

제1장. 일제의 조선강점, 반일의병투쟁
과 애국문화운동

제1절. 1905년 일제의 조선강점

제2절. 항일의병투쟁

제3절. 애국문화운동

제2장. 1919년 3.1인민봉기

제1절.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
치〉

제2절. 1910년대 반일독립운동

제3절. 3.1인민봉기

제3장.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과
초기공산주의운동

제1절.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

제2절.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쇠퇴

제3절.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과 초기공산주의운동

제4절. 19세기 후반기—20세기
초의 문화

조선민족의 풍습

[토론]

북한 역사교과서 『조선력사』의 ‘근대사’ 서술에서 배제와 부정

이인정 통일교육원 교수

북한 『현대조선역사』 등 역사교재의 ‘현대사’ 서술 분석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 목 차 >

I. 개 요

II. 북한의 교육제도 현황 및 역사 교육 현황

1. 북한의 교육제도 현황
2. 북한 역사 관련 교육 현황과 교재 현황
3. 연구 분석 북한 역사 관련 교재 소개

III. 북한 역사 관련 교재에서 한국 현대사 서술 분석 요약

IV. 북한 역사 관련 교재에서 한국 현대사 서술 분석 본문

I. 개 요

2013년 이른바 ‘교과서 파동’ 이후 한국사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대표 이종철)는 2011년 김정제를 통해 처음 발행된 6종 한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2013년에는 검정을 통과한 8종 한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보고서를 내는 등 꾸준한 연구 결과물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논쟁의 중심에 존재해 왔다.

이번에는 북한 역사 관련 교재들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남북한 현대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 역사 관련 교재에서 한국 관련 기술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와의 비교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남과 북 역사 교과서의 비교 검토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과서 및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다 객관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매개이자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고에서는 우선 북한 역사 교재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기술의 기본적인 요점을 대입시켜 살펴본다면 일정 정도 비교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본 고의 작업을 토대로 한국사 교과서 내용과의 본격적인 비교 분석이 다음 논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Ⅱ. 북한의 교육제도 현황 및 역사 교육 현황

1. 북한의 교육제도 현황

북한의 학교교육체계는 지난 2013년에 변경되지 전까지 11년 의무교육제도를 기본으로 하였다.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 구성되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2012년 9월 25일)에서 12년 의무교육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바뀐 학제에 따라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되어 교육제도가 운용되고 있다.¹⁾

2. 북한 역사 관련 교육 현황과 교재 현황

북한의 교육 목적은 이른바 ‘공산주의 인간형’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 방침이 사회주의 교육전반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의 교육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잘 나와 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²⁾

1) <2014년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38p

2) <2014년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34p

북한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혁명가는 주체형 혁명가 즉 김일성 가계에 충성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 방향에 맞게 북한 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은 김일성 가계의 혁명역사 및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 김일성 가계를 제외한 역사 과정도 김일성 가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민중주의, 민족주의를 결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래 본문에서 북한 역사 관련 교재를 분석한 내용에 의하여 보아도 북한 역사 관련 교과서의 핵심 주제와 방향은 아래의 표에 나타나듯이 김일성 가계의 활동과 치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북한 소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³⁾

구 분	교 과 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	2	3	4
1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2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3	항일의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1

[표2] 북한 중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⁴⁾

구 분	교 과 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	2	3	4	5	6
1	위대한수령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수령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1	1	1			
4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2	2	2
5	항일의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1		
6	력 사	1	1	2	2	2	2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역사 관련 교과서 중에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보관 중인 원서 중에 해방이후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 관련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역사 관련 교과서 중에 -김일성 가계 혁명역사 및 혁명활동을 포함해서- 해방 이후에 현대사와 그 중에 남한과 관계된 교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역사 관련 교재의 내용과 우리나라 한국사 검정교과서와

3) <2014년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46p, 표6-4 북한의소학교교육과정(1996년3월기준) 편집 재인용

4) <2014년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47p, 표6-5 북한의중학교교육과정(1996년3월기준) 편집 재인용

의 동일 대상 비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 존재한다.

3. 연구 분석 북한 역사 관련 교재 소개

본 연구검토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역사 관련 교재를 사용하였다. 북한 원전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하였고 원전은 현재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서 보관 중인 최신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정에서의 불가피한 한계도 있다.

첫째는 현재 정부에서 보관중인 북한 교과서가 가장 최근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경우는 2013년에 검정통과된 교재를 사용하여 최신 버전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나 북한의 원전은 최신버전을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장자료 중에 최근에 발행된 것을 기준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둘째는 북한의 역사 교과서 내용 자체의 빈약함에서 오는 분석의 어려움이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역사교재는 크게 역사자체의 교재와 김일성 가계의 혁명 역사를 중심으로 한 우상화교재로 나뉘져 있는데 역사교재 자체가 내용이 빈약하고 김일성 가계의 혁명역사의 경우는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는 것보다 정치선전에 치중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 고교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로서의 분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교재는 아래와 같다.

[표3] 연구 분석에 활용된 북한 역사 관련 교재 목록

구분	교과명	해당학년	내용
1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중 4년	김일성일대기(~1960년 12월)
2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중 5년	김일성일대기(1960년~1994년)
3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2년	김일성일대기 (사례중심)
4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3년	김일성일대기(사례중심)
5	항일의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중 4년	김정숙일대기(~사망까지)
6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중 6년	김정일일대기(1974년~2000년)
7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혁명활동	중 3년	김정일일대기(사례중심)
8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중 2년	김정일일대기(사례중심)
9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	중 6년	미국과 일본의 침략일대기

10	현대조선역사	북한원전(역사서)
11	조선통사(하)	북한원전(역사서)

북한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한계로 인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잘 정리가 잘 되어있는 ‘현대조선역사’와 ‘조선통사(하)’ 두 권을 참조하였다. 이 두 권의 책의 경우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역사 관련 교재이고 실제 북한의 역사 관련 교재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권 중에 현대조선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통사(하)와 기타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역사 관련 교재를 활용하여 한국의 현대사 부분의 서술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주 분석 교재로 사용한 조선현대역사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표4] 현대조선역사 목차

제1편: 항일혁명투쟁

- 1. 부르조아민족운동시기의 종말, 초기공산주의 운동
- 2.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출발
- 3.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무장투쟁의 첫단계
- 4.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 무장투쟁의 둘째단계
- 5.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 항일무장투쟁의 셋째단계
- 6.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

제2편: 새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 1.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수행
- 2.사회주의 혁명단계로의 이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
- 3.조국해방전쟁

제3편: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 1.사회주의기초건설
- 2.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 3.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 4.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
- 5.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 6.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의 강화

Ⅲ. 북한 역사 관련 교재에서 한국 현대사 서술 분석 요약

■ 미국에 대한 분단 책임

북한의 역사 관련 교재는 일관되게 소련은 해방군으로 미국은 점령군으로 묘사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미국의 점령(강점)으로 인하여 남한 민중의 염원이 분쇄되었다는 방식으로 기술하였으며 미국에 의해서 먼저 일본군대 무장해제를 빌미로 38선이 획정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이 분열되었다는 미국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북한에서는 미국에 의한 군정통치 및 식민통치의 시작점이라고 제시하면서 맥아더 포고령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남한의 애국자들을 탄압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미국이 조선에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 친일파 청산과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서술

미국은 남한의 점령을 위해서 김성수 등의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고 이승만을 불러들여 미국 점령 정책의 주축으로 삼았다고 기술하면서 이승만에 대하여 부정 일변도의 기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친일파 청산이 잘 되었음을 시종일관 강조하며 북한 정권 내 친일파 등용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소련에 의한 점령과 김일성 중심의 권력 형성에 대한 설명이 없이 미국의 남한에 의한 점령을 묘사하면서 북한 김일성의 정권 수립의 불가피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 북한의 정권 수립 과정에 대한 기술

1948년 남한의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 이전에 북한에서는 이미 정권 수립을 위한 절차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정부라고 볼 수 있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행정10국 설립 등 내부적 정권 수립을 위한 기초가 완성되었고 1947년에는 각 시도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의가 사실상 성립하여 북한의 정권 수립이 사실상 남한의 단독 선거 전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 북한의 토지개혁 등 개혁 조치와 북한 정권의 공고화 조치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강조하고 토지개혁의 역사적 정당성만 주장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매매와 저당이 되지 않는 불완전 개혁이고 이후 협동화(국유화)로 가기 위한 전단계였다는 정확한 설명은 없다. 또한 토지개혁과 더불어서 각종 법령들이 제정되어 북한정권의 공고화가 더욱 진행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각종 제도의 발포와 더불어서 북한 정권의 공고화 작업 중의 일환으로 이른바 통일전선운동 조직체 건설이 북한에서 진행되었고 통일전선운동을 남한으로 확대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통일전선운동을 통하여 남한 좌익세력들이 반정부투쟁에 조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남한 공산당의 지도의 실패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김일성이 중심에서 수습하게 되었다는 김일성 중심의 서술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 모스크바 3상회의와 반탁운동

해방 이후의 소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친소적으로 서술되었다.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소련은 조선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국은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방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당시 좌익세력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고 반탁운동을 매국운동으로 미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유지 차원의 운동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북한 교과서 기술에서는 친탁운동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보다 솔직하게 남한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기술하면서 전국적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친탁을 찬성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 남한 내의 반정부활동과 '남한단독정부수립' 및 남북합작운동

해방 당시의 미군정은 정책을 미국에 의한 식민지예속정책이라고 기술하면서 남한내의 좌익에 의한 조직적 활동에 대해서 반미구국활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남한 만의 단독선거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김일성은 남북합작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한국의 경우 해방 전의 독립투사로 해방 후는 통일운동을 해서 명망이 높고 현재 많은 교과서에서 이승만과 대비되어 존경받는 김구가 북한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역사 관련 교재에서는 김구가 평양의 연석회의 과정에서 김일성이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 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다양한 각도로 서술하여 그들이 김구를 철저히 이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없이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남북합작운동과 단독선거를 연계하여 묘사하면서 북한의 서술과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술하였다.

■ 5.10 선거에 대한 폄훼와 여순사건

남한단독선거에 대해서 북한의 투표율도 낮고 미국의 의한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남한 국민의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5.10선거가 사실상 파탄이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서술 형태는 5.10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일부 한국의 역사 교과서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순반란사건의 기술에서도 북한에서 묘사한 서술 방식이 한국의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투영되고 있다. 여순반란사건이 좌익에 의한 조직적 반란사건임에도 제주도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에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궤기”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북한 역사 교과서는 남한내 폭력투쟁에 대해서 좌경과 우경을 번갈아 범했다는 식으로 비판하며 박헌영 등 남노당 지도부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해 발생한 무장투쟁들이 좌익에 의해 선도된 활동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있다.

■ 6.25전쟁과 양민학살

6.25전쟁이 이미 ‘냉전 자료’의 해제에 의해서 김일성의 남침야욕이 빚은 전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미국에 의한 북침전쟁이었다고 역사 관련 교재는 기술하고 있다. 전쟁 중 미국에 의한 양민학살을 거론하면서 주민들에게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 서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한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도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을 보다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는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 주체사상

북한의 역사 관련 서술에서는 주체사상의 위대함과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한 독자적 창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에 의해 창시되고 김정일에 계승발전되었다고 북한은 서술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의 독보성 및 독창성 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에도 주체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리를 그대로 전하면서, 주체사상이 황장엽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독재정권을 유지 강화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는데 북한 역시 황장엽 등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 남한의 전후 정책에 대하여

북한은 이승만과 미국에 대하여 시종일관 극도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한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 역시 이승만에 대한 비슷한 관점과 평가의 기술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 한국 원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묘사로 이어졌다. 남한의 중소기업과 농촌경제가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파탄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의 이승만 정부 시절의 토지개혁의 실패 사례와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에 의한 농촌경제의 붕괴 및 원조 자금에 따른 정경유착 등의 기술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4.19 혁명과 5.16 및 박정희 정부

북한은 4.19 혁명의 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조종을 받는 이승만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억압이 주 원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4.19 혁명이 광범위한 반미구국항쟁이었으며 항쟁 후 장면 정권의 등장은 다시 친미정권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로 인하여 남한의 학생들과 인민들이 더욱 투쟁을 하자 미국의 조종에 의하여 5.16이 발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5.16으로 들어선 남한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군사파쇼정권으로 이들을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인테리들이 광범위하게 투쟁하였으며 6.3 한일회담반대투쟁, 삼선개헌반대 투쟁 등 민주화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표현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 노동자와 농민의 삶은 더욱 피해해지고 민주주의는 퇴보했으며 이로 인해 결국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서술 형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진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민주화 운동 및 노동자 농민 운동에 대한 비중있는 기술, 특히 노동자 농민의 삶의 수준이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한국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북한 교과서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

■ 조국통일 3대원칙과 7.4남북공동성명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이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 3원칙에 의거하여 남측이 수용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역사서에 기술하고 있다. 심지어는 남측 대표가 김일성 앞에서 맹세를 했다는 표현으로 김일성의 위대한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7.4남북공동성명 등의 남북회담이 남한 정부가 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7.4공동성명에 대한 관점은 한국

의 고교 역사 교과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령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역사서술에서는 남한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이고 북한 내부에 대한 비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에 많은 물자를 지원하였다. 북한은 그러나 김대중 정부를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하였고 남북정상회담 역시 김정일이 김대중 전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서 회담을 했다는 등 김정일의 업적 위주로 기술하고 있다.

■ 5027 작전계획과 제1연평해전에 대한 기술

1998년 5027 작전계획은 한미양국에 의한 북한의 침공시 반격계획이나 북한은 이를 <제2의 조선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전쟁위협이 임박한 것처럼 묘사하였다. 또한 1999년 제1연평해전(북한에서는 ‘서해상사건’으로 기술)을 왜곡 기술하였다.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의 교전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왜곡하였다.

IV. 북한 역사 관련 교재에서 한국 현대사 서술 분석 본문

■ 미국에 대한 분단 책임

북한의 역사 관련 교재는 일관되게 소련은 해방군으로 미국은 점령군으로 묘사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미국의 점령(강점)으로 인하여 남한 민중의 염원이 분쇄되었다는 방식으로 기술하였으며 미국에 의해서 먼저 일본군대 무장해제를 빌미로 38선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이 분열되었다는 미국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북한에서는 미국에 의한 군정통치 및 식민통치의 시작점이라고 제시하면서 맥아더 포고령을 인

용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남한의 애국자들을 탄압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미국이 조선에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소련군에 의한 행방을 강조하며 소련군의 포고문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나타나듯이 미군과 소련군의 포고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통해 독자에게 어떤 인상과 인식을 줄 수 있을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조선역사⁵⁾

173p

국무성 관리들은 트루만에게 될수록 서울 이북 먼 곳에 소미간의 분담선을 그을 것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미국 형편으로서는 그럴힘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를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여 소미간에 나누어 한다는 것이었다. <일반명령 1호> 이처럼 미제는 일본군대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38선을 고안해냈으며 조선을 분열시킨 장본인으로 되었다.

174p

*1945년 9월 7일 미 태평양군총사령관(맥아더)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국육군의 최고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 이남과 동 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치함.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포고함.

조선 북위 38도선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들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함.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된 명령에 즉각 복종할 것. 점령군대에 대해서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보안을 문란히 하는 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

군정기간 중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군정법령집』, 1948년판, 1쪽)

조선주둔 미사령관 하지는 조선을 <<미국의 적국>> 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조선은 항복조건에 복종>> 해야 할 의무만 있다고 떠벌렸다. (『일본일기』 하 <일문>, 축마서방, 1951년판, 166쪽)

175p

때문에 미국의 한 기자는 남조선에 와보고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었다. 미군은 남조선을 해방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점령하기 위하여 조선사람이 항복조건에 복종하는가 안하는가를 감시하기

5) 김한길, <현대조선역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3년, 일송정

위하여 온 것> 이라고 개탄하였으며 미군이 남조선에 와서 2개월 동안 한 일이란 인민들이 자기의 손으로 세운 인민위원회들을 지하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일기〉〈일문〉, 축마서방, 1951년판, 95, 166쪽)

조선통사(하) ⁶⁾

287p

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은 위대한 쏘(소)련군대에 의하여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되었(었)다. 쏘련군대에 의한 조선해방은 조선인민의 역사발전에 새 기원으로 되었다.

288p

민족자결에 관한 레닌적 원칙에 충실한 쏘련군대는 우리 조국강토에 진주한 첫날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조선인민들이여!...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새 조선역사의 첫 페이지(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려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달성한다. ...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쏘련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7)

13p

38분단선 조작

미제의 의한 38분단선의 조작은 조선분렬의 시초로 되었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점령

38분단선을 조작한 미제는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며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허울밑에 1945년 9월 8일부터 10월 말까지 남조선 전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강점하였다.

6) 〈조선통사(하)〉, 과학원 역사연구소, 1989년, 도서출판 오월

7)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 중학교 6학년, 2003년, 교육도서출판사

■ 친일파 청산과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서술

미국은 남한의 점령을 위해서 김성수 등의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고 이승만을 불러들여 미국 점령 정책의 주축으로 삼았다고 기술하면서 이승만에 대하여 부정 일변도의 기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친일파 청산이 잘 되었음을 시종일관 강조하며 북한 정권 내 친일파 등용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소련에 의한 점령과 김일성 중심의 권력 형성에 대한 설명이 없이 미국의 남한에 의한 점령을 묘사하면서 북한 김일성의 정권 수립의 불가피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175-176 pp

미제는 인민탄압에 날뛰면서[열중하면서]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반동분자들을 집결시키기에 급급하였으며 그들을 군정기관내에 끌어들여 식민지통치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다.

미제는 대치주이며 친일자본가이며 제2세계대전 때 조선청년들이 일본을 위하여 많은 피를 흘릴 것을 선전하던 민족반역자 김성수를 비롯하여 한국민주당(미군이 서울에 들어오던 1945년 9월 9일에 결성된 극우역민족반역자들의 당)계열의 반동분자들을 군정고문으로 임명하였으며 대법원장, 대법관, 검사총장을 비롯하여 지방말단의 판사, 검사들까지도 모두 친일매국노들로 채웠다.

미제는 이것으로도 마음이 안놓여 저들의 오랜 주구인 이승만을 급히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여와 반동의 주축으로 삼았다.*

* 이승만은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조직되었던 민족주의집단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대통령에게 조서에 대한 위임통치를 청원하는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미국에 가서는 올리버, 굿벨 등 미국자본가들에게 앞으로 조선독립 후 경제적 이권, 특히 광산에 대한 이권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받고 살았다. (『현대조선의 역사』 <일문>, 3.1서방, 1953년판, 27쪽. 『현대조선사』 1<일문>, 다이헤이출판사, 1974년판, 145쪽, 『사상계』 <남조선>, 1965년 9월호, 196쪽 참조)

176p

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북조선은 진보와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으며 인민들에게 또다시 노예적 굴종이 강요되게 된 남조선은 반동과 예측의 암담한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게 되

었다.

180 p

이리하여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밑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당창건 위업은 완성되었고 영광스러운 <<트 드>>의 전통을 계승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 형의 혁명적 당, 백전백승하는 주체형의 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 북한의 정권 수립 과정에 대한 기술

1948년 남한의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 이전에 북한에서는 이미 정권 수립을 위한 절차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정부라고 볼 수 있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행정10국 설립 등 내부적 정권 수립을 위한 기초가 완성되었고 1947년에는 각 시도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사실상 성립하여 북한의 정권 수립이 사실상 남한의 단독 선거 전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현대조선역사

184 p

1945년 11월 19일에 북조선 행정10국이 조직되었다. 지방인민위원회들의 조직강화와 행정10국의 설치에 북조선에 중앙정권기관을 창설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185 p

1946년 2월 8일 북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들의 협의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북조선 중앙주권기관을 세우는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그 기관으로서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김일성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최고집행권을 행사하는 것과 함께 임시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다.

205 p

먼저 도, 시, 군 인민위원회선거가 1946년 11월 3일에 실시되고 이듬해 2월과 3월에 리(동)와 면

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 도, 시, 군 인민위원회선거에서는 유권자 총수 99.68%가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97.06%의 유권자가 민전입후보자에게 찬성투표를 하였다. ... 1947년 2월 17일 평양에서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대회가 소집되었다. 여기에서 새로 선거된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서 1명씩 선출된 위원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법령들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1947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북조선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다. ... 김일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었다.

■ 북한의 토지개혁 등 개혁 조치와 북한 정권의 공고화 조치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강조하고 토지개혁의 역사적 정당성만 주장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매매와 저당이 되지 않는 불완전 개혁이고 이후 협동화(국유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였다는 정확한 설명은 없다. 이와 더불어서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에 따라서 농민계층이 적극적인 지지 계층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토지개혁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실시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또한 토지개혁과 더불어서 각종 법령들이 제정되어 북한정권의 공고화가 더욱 진행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각종 제도의 발포와 더불어서 북한 정권의 공고화 작업 중의 일환으로 이른바 통일전선운동 조직체 건설이 북한에서 진행되었고 통일전선운동을 남한으로 확대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통일전선운동을 통하여 남한 좌익세력들이 반정부투쟁에 조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남한 공산당의 지도의 실패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김일성이 중심에서 수습하게 되었다는 김일성 중심의 서술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현대조선역사

188p

- 일제의 소유토지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지 및 5정보 이상을 가진 지주의 토지, 계속 소작을 주고 있던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의 소유로 한다.
- 농호의 가족수와 노력자수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며 분여된 토지의 매매와 저당, 일체 소작제도를 금지한다.
- 몰수한 산림, 관개시설, 과수원 및 농민들이 경작하기 불리한 일부 토지는 국유화한다.

189p

이 토지개혁 법령은 전국 농민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농민들은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토지개혁을 진행함에 따라 공산당과 인민정권은 빈고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굳게 동맹하는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전국 각지에 빈고농들로 1만 1500여 개의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어 토지를 몰수하고 분배하는 사업이 직접 집행하였다.

191p

김일성은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채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된 결과 산업의 90% 이상에 달하는 1034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전인민적, 국가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운수, 채신시설들과 은행, 대외무역, 문화기관들이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192p

김일성은 1946년 6월 24일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발표하였다.

193p

김일성은 1946년 7월 30일에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202p

1946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3차회의와 194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대책이 세워졌으며 뒤이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건국사상총동원선전요강〉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200p

1946년 2월 15일 남조선의 40개 정당, 사회단체들으로써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결성되었다. 민족전선은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경제건설과 부흥, 토지문제 해결, 8시간 노동제, 민생문제 등의 요구들을 내걸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공산당(노동당)이 자기 역할을 옹기 수행하지 못했고 또한 다른 정당들 내에서도 동요성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하여 통일전선운동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48년 4월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가 소집될 수 있었다.

조선통사(하)

312p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를 단행함과 함께 노동법령과 남녀평등권 법령을 공포 실시하였다.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님의혁명활동⁸⁾

제6과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19p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서는 법령에서 높고먹던 지주놈의 땅과 소작주던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그것을 농민의것으로 만들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 모스크바 3상회의와 반탁운동

해방 이후의 소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친소적으로 서술되었다.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련은 조선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국은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방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당시 좌익세력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고 반탁운동을 매국운동으로 미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유지 차원의 운동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친탁운동은 좌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판단해보면 친탁운동은 친공산주의 친소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었다. 오히려 북한 교과서 기술에서는 친탁운동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보다 솔직하게 남한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기술하면서 전국적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친탁을 찬성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215p

물론 조선인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소미 양군이 일제군대를 무장해제시킨 다음 동시에 즉시 철수하며 조선인민의 손으로 자주독립국가를 하루속히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군대가 우

8)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님의혁명활동〉, 고등중학교 2년, 2000년, 교육도서출판사

리나라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의 이 염원이 순조롭게 실현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조성된 정세하에서는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실현하는 것이 조국의 통일독립을 빨리 이룩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길일 수 있었다.

조선통사(하)

300p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은 북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결정에 대한 공동지지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에 관한 쏘,미,영 모스크바 3국회상회의결정은 정의화 성의의 표현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그 기초 위에 전선민주주의임시정부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독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조선국가 건설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고 전체인민들에게 호소했다.

■ 남한 내의 반정부활동과 ‘남한단독정부수립’ 및 남북합작운동

해방 당시의 미군정은 정책을 미국에 의한 식민지예속정책이라고 기술하면서 남한내의 좌익에 의한 조직적 활동에 대해서 반미구국활동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1947년 이미 북한에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준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에 의해서 상정된 유엔을 통한 선거 독립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었다. 이미 북조선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수립을 획책했던 김일성은 유엔을 통한 선거가 북한에서도 실시되게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유엔의 결정이 비법적이고 미국의 주도로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처럼 기술하였다.

남한 만의 단독선거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김일성은 남북합작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이는 이미 정권이 공고화되어있는 북한에 유엔의 의한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 중심 즉 김일성이 수반이 되고 공산주의가 주도로 되는 정부수립을 위한 이른바 공산당 식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었다. 남북합작연석회의를 통해서 남한에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고 북조선 중심으로 정부 수립을 획책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남북합작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당시 남한측 인사들을 철저히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해방 전의 독립투사로 해방 후는 통일운동을 해서 명망이 높고 현재 많은 교과서에서 이승만과 대비되어 존경받는 김구가 북한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역사 관련 교재에서는 김구가 평양의 연석회의 과정에서 김일성이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 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다양한 각도로 서술하여 그들이 김구를 철저히 이용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없이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남북합작운동과 단독선거를 연계하여 묘사하면서 북한의 서술과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술하였다.

현대조선역사

220 p

10월 1일 대구에서 군중들에 대한 무장경찰의 발포를 계기로 폭발한 인민항쟁은 점차 남조선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항쟁군중들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 반대!>, <<정권은 인민위원회로!>>,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힘차게 싸웠다.

222 p

1947년 11월 14일 유엔 제2차 총회 전원회의에서 미제는 저들의 추종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9개 나라 대표들로 구성되 이른바 <유엔임시위원단>을 조직하여 1948년 3월 31일 이내로 그의 감시 밑에 <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수립하는데 대한 비법적 결정을 강압통과시켰다. 미제는 미리 세워진 계획에 따라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에서 강권을 발동하여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감시> 밑에 남조선만이라도 단독선거를 실시하는데 대한 범죄적 결의를 날조하였다.

225 p

...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남조선과 망국적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수립을 견결히 반대배격하며 북조선 민주개혁과 건설성과를 자주독립의 토대로 인정하며 소미양군의 동시 철거를 3000만 동포의 이름으로 요청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25 p

남북연석회의의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남북조선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신망을 지니고 있는 김일성의 탁월한 영도와 헌신적인 노력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 남조선의 한 대표는 <<...나는 아시아, 구라파 등 대소 여러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걸출한> 사람들, 수다한<영웅호걸>들을 봤지만 아직 김일성과 같이 그렇듯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를 만나본 적은 없었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일생을 두고 <<반공>>을 일삼아오던 김구까지도 <<현재 통일독립을 방해하는 최대의 것은 단독선거, 단독정부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공통한 투쟁목표는 이것을 분쇄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서 김일성의 보고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을 바로잡을 영웅은 김일성 밖에 없다고 하면서 <김일성 장군이 영도해야 조선은 행복하게 될 수 있소, 진짜 공산주의가 김장군이 베푸는 그런 정치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왜 반대해 나서겠소?... 나는 김일성장군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소.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라고 탄복하였다. (그는 회의후에 남조선에 나가 자기의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싸우다가 1949년 6월에 이승만이 밀파한 육군소위 안두희에게 피살되었다. 살인자는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으나 1년후에 석방되어 곧 중령으로 승진하였다.)

남북연석회의를 통하여 남북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은 더욱 튼튼히 결속되었으며 김일성의 영도 밑에 망국단선을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구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⁹⁾

7.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

130p

김정숙 어머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은 김구로 하여금 우리와 손 잡고 나가며 조국통일을 위해 한몫 바쳐 싸우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님의 혁명활동¹⁰⁾

제13과 남북연석회의의 나날이 안겨주신 사랑

46p

참으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북과 남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한 력사적인 첫 대민족회의였습니다.

49p

9)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중학교 4학년, 2003년, 교육도서출판사

10)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님의혁명활동>, 고등중학교 2년, 2000년, 교육도서출판사

김구는 남조선으로 떠날 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애국자들이라고 하면서 <저는 장군님을 받들어 나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굳은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어둠속에서 헤매던 김구가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5.10 선거에 대한 폄훼와 여순사건

남한단독선거에 대해서 북한의 투표율도 낮고 미국의 의한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남한 국민의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5.10선거가 사실상 파탄이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서술 형태는 5.10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일부 한국의 역사 교과서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순반란사건의 기술에서도 북한에서 묘사한 서술 방식이 한국의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투영되고 있다. 여순반란사건이 좌익에 의한 조직적 반란사건임에도 제주도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에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꺾기”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여순사건과 이후 대구의 6연대 사건 등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강원도에서 등에서 광범위한 무장투쟁과 노동자 농민들의 폭동들이 발생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북한 역사 교과서는 남한내 폭력투쟁에 대해서 좌경과 우경을 번갈아 범했다는 식으로 비판하면서 박헌영 등 남노당 지도부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해 발생한 무장투쟁들이 좌익에 의해 선도된 활동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227p

당시 외국통신들이 전한 데 의하면 미제는 인민들의 반대투쟁을 압살하고 단선을 감행하기 위하여 5월 10일 전투함과 대형폭격기를 다수 동원하였으며 탱크와 대포, 기관총으로 장비된 대기동부대를 남조선 전역에 출동시키고 경찰, 테러단, <<향보단>>까지 총동원하여 인민들을 강제로 <<선거장>>에 끌어내었다. <<선거장>>의 주위에는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기관총까지 설치해 놓았다. 이것이 그들이 떠든 이른바 <<선거>>의 <<자유분위기>>였다.

227p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곳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제주도인민들은 무장으로 반동정

찰을 제압하고 <선거>를 완전히 분쇄해 버렸다. 바빠맞은[바빠진] 남조선 반동들은 대구, 함양 등지에서 강제적으로 인민들을 <선거장>에 끌어냈으나 참가율이 겨우 10~30%에 지나지 않았다.

228 p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46개소의 <<선거장>>과 73개소의 경찰서, 관청이 완전히 파괴, 소가되었으며 수백개소의 경찰서와 관청, <<선거사무소>> 등이 습격당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미제가 강압실시한 5.10단선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었다.

229 p

... 12월 12일에는 또다시 유엔총회에 강요하여 남조선<정부>가 조선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된다는 부당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241 p

1948년 10월에 여수주둔 <국방군> 제 14연대의 애국적 병사들이 폭동을 일어났다. 제주도인민항쟁을 진압하라는 동원령을 받은 14연대 병사들은 동족살육에 내모는 정권의 배족행위에 분격하여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단연 폭동에 궤기하였다. 폭동군인들과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미군은 철거하라!>>, <<남조선단독정부를 철저히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경찰서를 비롯한 적 통치기관을 분쇄하고 악질주구를 처단하였다. 해당지역인민들은 인민위원회를 복구하였으며 ... 토지개혁의 실시를 선포하였다.

242 p

남조선에서의 유격활동은 급속히 확대되어 한때에는 거의 모든 주요산악지대들이 유격활동지대로 되었고 유격대들의 활동범위는 많은 도들에 미쳤다. 그리고 유격투쟁에 호응하여 곳곳에서 노동자, 농민대중의 폭동과 악질분자들을 처단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1948년~1949년에 벌어진 군인들의 폭동과 인민들의 유격투쟁, 노동자, 농민대중의 폭력적 투쟁은 참으로 영웅적인 항쟁이었다.

그러니 이 투쟁은 정확한 지도를 받지 못하여 지나친 희생을 낸 반면에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였다.

김일성은 언제나 혁명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서 혁명역량의 축적과 당면한 투쟁의 정

확한 결합을 내세웠으며 우경투항주의와 좌경모험주의를 다같이 경계하는 데 대하여 일관되게 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헌영 간첩일당의 배신행위과 해독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남조선노동당 지도부는 좌경과 우경을 번갈아 범하며 폭력투쟁에서는 극단적 모험주의를 발로시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수군인폭동에서도 유격투쟁에서도 무모한 모험주의가 계속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이 투쟁들은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혁명역량에 막대한 희생을 가져왔다.

조선통사(하)

353p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애국적 인민들은 일제히 쫓겨나서 도내 14개소의 경찰지서들을 습격소탕하고 악질반동과 테로분자 및 경관들을 모조리 처단하였다. 그 후 무장한 인민들은 한라산에 근거지를 정하고 계속 경찰지서들과 선거장들을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제주도에서는 종시(끝내) 선거의 흥내조차 내지 못하고 말았다.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

16p

5.10 단선과 리승만괴뢰 <정권> 조작

미제는 1948년 5월 10일 남조선에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독 <선거>를 감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날조하여 8월 15일에는 리승만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님의혁명활동¹¹⁾¹²⁾

제14과 공화국을 창건하시던 나날에

50p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섰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벌려놓은 미제의 선거놀음은 완전히 파탄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미제놈들은 <선거> 결과를 날조하여 제놈들의 앞잡이인 리승만을 우두머리로 하는 괴뢰정권을 꾸며냈습니다.

11)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님의혁명활동>, 고등중학교 2년, 2000년, 교육도서출판사

12)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님의혁명활동>, 중학교 4년, 2003년, 교육도서출판사 에도 비슷한 내용이 서술됨

■ 6.25전쟁과 양민학살

6.25전쟁이 이미 ‘냉전 자료’의 해제에 의해서 김일성의 남침야욕이 빚은 전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미국에 의한 북침전쟁이었다고 역사 관련 교재는 기술하고 있다. 전쟁 중 미국에 의한 양민학살을 거론하면서 주민들에게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 서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한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도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을 보다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는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288p

〈〈설사 그대들 앞에 있는 것이 어린애나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어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하는 것이며 또 유엔병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제침략군 제8군사령관이 자기 고용병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

4. 인민학살과 파괴약탈만행

23p

공화국남반부에서 학살한 수-100여만명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에서 1,000여명, 춘천에서 3만여명, 대전에서 3,000여명, 안성에서 5,000여명, 전주에서 4,000여명 등 모두 100여만명을 학살하였다.

■ 주체사상

북한의 역사 관련 서술에서는 주체사상의 위대함과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한 독자적 창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에 의해 창시되고 김정일에 계승발전되었다고 북한은 서술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의 독보성 및 독창성 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에도 주체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리를 그대로 전하면서, 주체사상이 황장엽 등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독재정권 독재정권을 유지 강화시키는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는데 북한 역시 황장엽 등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360 p

〈우리당 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362 p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세우는 동시에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였다.

■ 남한의 전후 정책에 대하여

북한은 이승만과 미국에 대하여 극도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한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 역시 이승만에 대한 비슷한 관점과 평가의 기술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 한국 원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묘사로 이어졌다. 남한의 중소기업과 농촌경제가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파탄되었다고 기술하였고 남한의 토지개혁을 언급하면서 토지개혁은 실패했으며 소작인 등으로 다시 전락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의 이승만 정부 시절의 토지개혁의 실패 사례와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에 의한 농촌경제의 붕괴 및 원조 자금에 따른 정경유착 등의 기술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52 p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이승만 정권은 남조선인민들에게 과소적〈법질서〉를 강요하기 위하여 미〈군정〉 당시에 조작한 수많은 악법들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한편 〈신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새로 조작하여 인민탄압에 적용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453 p

... 미국 상품의 범람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료, 기자재의 가격인상과 가중한 세금부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중소기업자들이 파산영락되게 되었다. 공장, 기업소들의 90% 이상은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중소기업들이었는데 이것들은 원료, 동력 및 자금의 부족과 판로난, 과중한 세금으로 하여 조업을 단축하거나 파산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453 p

〈원조〉를 공간으로 하여 감행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남조선 농촌경제도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조선통사(하)

341 p

이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민족공업과 농업을 모조리 파괴 영락시키고 자기들의 잉여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

14 p

경제적 예속화

〈적산〉 강탈

미제는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하여 남조선 경제의 주요 명맥을 〈적산〉이라는 미명밑에 송두리째 강탈하였다.

〈원조〉

미제는 〈원조〉의 간판 밑에 변질된 식료품과 팔리지 않고 남은 소비품을 원조라는 미명밑에 남조선경제의 자립적발전의 길을 완전히 막아 치웠다.

■ 4.19 혁명과 5.16 및 박정희 정부

북한은 4.19 혁명의 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조종을 받는 이승만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억압이 주 원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4.19 혁명이 광범위한 반미구국항쟁이었으며 항쟁 후 장면정권의 등장은 다시 친미정권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로 인하여 남한의 학생들과 인민들이 더욱 투

쟁을 하자 미국의 조종에 의하여 5.16이 발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5.16으로 들어선 남한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군사파쇼정권으로 이들을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인텔리들이 광범위하게 투쟁하였으며 6.3 한일회담반대투쟁, 삼선개헌반대 투쟁 등 민주화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표현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 노동자와 농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민주주의는 퇴보했으며 이로 인해 결국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서술 형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진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민주화 운동 및 노동자 농민 운동에 대한 비중있는 기술, 특히 노동자 농민의 삶의 수준이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한국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북한 교과서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457p

1958~1959년에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투쟁은 390건이나 일어났으며 같은 기간에 농민들의 각종 투쟁은 320건에 달하였다.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투쟁도 줄기차게 일어났다. 미제와 이승만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1960년 4월에 이르러 이승만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대중적 봉기로 발전하였다.

462p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등 군내의 극단적인 파쇼분자를 내세워 <군사정변>을 도발케하여 장면<정권>을 밀어던지고 그대신 가장 포악한 군사파쇼독재<정권>을 조작하였다.

463p

들의 파쇼적 폭압의 예봉은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탄압하는데 돌려졌다.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 기관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이 파쇼통치의 희생물이 되었다.

465p

노동자, 농민과 청년학생, 인텔리 등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들도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를 들고 미제와 박정희정권의 군사파쇼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히 참가하였다.

477p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은 1969년 박정희정권이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행한 <3선개헌> 책동을 계기로 또 다시 세차게 벌어졌다.

480p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 300명은 교내 <4.19의거탑> 앞에 모여 <누구를 위한 10월유신이나 국민의 노예화를 위한 것인가> 라는 구호를 내걸고 <유신> 파쇼독재를 반대하는 항쟁의 봉화를 올렸다. 그들은 1. 정보파쇼통치를 즉시 그만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체제를 확립하라 2. 대일예속을 즉각 그만두고 민족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존권리를 보장하라 3. 정보파쇼통치의 원흉인 <중앙정보부>를 즉시 해체하고 김대중사건의 진상을 당장 밝혀라 4. 기성정치가, 언론인들은 심각히 반성하라는 4개조항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도와 같이 시위에 떨쳐나섰다.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

제2절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책동

1. 박정희군사독재<정권>과<유신체제>의 조작

35p

<유신>독재체제의 조작

... 미제의 부추김밑에서 박정희괴뢰역도는 1972년 10월 <비상사태>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개정>을 공포하는 <특별선언문>으로 내놓았다. 역도놈들은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속에서 <유신헌법>을 꾸며내고 12월23일에는 사실상 제놈을 종신 <대통령>으로 하는 <유신정체제>를 수립하였으며 25일에는 <제4공화국>을 조작하였다.

■ 5.18 미국 배후조종설

북한 교과서는 5.18 진압에 대해 미국이 배후 조종하여 직접 무력 진압에 나섰다고 기술하고 있다. 5,000명명이 학살되었다는 등 희생 규모도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5.18 진압에 대한 미국의 직접 개입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

술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다. 그러나 일부 한국의 한국사 교과서는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이 승인하여 광주로의 공수부대 투입이 가능했다는 식의 논리를 싣고 있다. 가령 금성 교과서는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세력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당시 국군 작전 통제권이 사실상 미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군부 세력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하여 미국의 책임 문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 5.18을 묘사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임을 볼 수 있다.

현대조선역사

489-490 pp

봉기군중들은 방대한 군병력이 사면팔방으로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10일 동안이나 <<계엄군>>의 공격으로 자기들이 차지한 광주시를 완강히 고수하였다. 겁에 질린 미제는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관 위컴을 호출하여 광주인민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대한 흉악한 살육작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미국방부는 남조선과 미국 연합군사령부에 직속된 군 2개 사단을 인민봉기탄압에 내몰았다.

미국제 환각제를 먹고 흥분된 특전대 살인귀들은 짐승도 낮을 불힐 잔인한 방법으로 남녀노소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 군의 총칼에 의하여 5,000여명의 봉기군중이 학살되고 1만 4,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수천여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봉기군중들은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자기들의 투지를 굽히지 않고 적들이 광주시를 유혈적으로 점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사전으로 항거하였다.

490 p

광주인민봉기는... 낡은 <유신> 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이었다. 그것은 또한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근대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크고 격렬한 대중적 폭동이었다.

...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에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남겨놓았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 조국통일 3대원칙과 7.4남북공동성명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이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 3원칙에 의거하여 남측이 수용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역사서에 기술하고 있다. 심지어는 남측 대표가 김일성 앞에서 맹세를 했다는 표현으로 김일성의 위대한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7.4남북공동성명 등의 남북회담이 남한 정부가 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7.4공동성명에 대한 관점은 한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령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역사서술에서는 남한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이고 북한 내부에 대한 비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대조선역사

505 p

김일성이 내놓은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이 마련되었으며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다.

511 p

회담에서 남조선측이 감행한 행동은 그들이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와 회담을 벌려놓고는 시간이나 보내면서 인민들의 시선을 판테로 돌리고 내외여론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에서 날로 심화되어가는 파쇼통치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권력을 지탱하는데 이 회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¹³⁾

제15과 북남대화의 문을 여시여

48 p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원칙에 남조선측 대표는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수상님께서 밝혀주신 이 세가지 원칙을 통일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고 나갈 것을 수상님앞에 맹세합니다.>라고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 그로부터 얼마 후인 7월 4일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

13)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 고등중학교 2년, 2002년, 교육도서출판사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에 많은 물자를 지원하였다. 북한은 그러나 김대중 정부를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고 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하였고 남북정상회담 역시 김정일이 김대중 전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서 회담을 했다는 등 김정일의 업적 위주로 기술하고 있다.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

4. 〈문민〉, 〈국민〉독재〈정권〉의 조작

37p

미제의 각본에 따라 1990년 2월 로태우, 김영삼, 김종필역도들이 야합하여 〈민자당〉을 조작하였다. ... 〈문민정권〉의 파쇼적반통일적본색이 드러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문민〉통치에 반대하는 투쟁이 양양되자 미제는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 연극을 벌려놓았다. 미제는 여당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김대중과 김종필이 합동하게 함으로써 1998년 2월 〈국민〉의 이름을 단 〈국민의 정부〉를 출현시켰다. 그러나 〈국민정권〉 역시 다같이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¹⁴⁾

력사적인 평양상봉, 6.15 북남공동선언채택

269 p

이러한 대세의 흐름속에서 남조선당국자는 우리에게 평양방문의사를 공식표명하여왔다. ...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통일의지,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주체 89(2000)년 4월에 북남합의서가 발표되었다. ... 주체89(2000)년 6월 13일 오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비행장에 나가시어 남조선당국자일행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시였다.

271p

오래동안 적대상태에 있던 북과 남이 이처럼 불과 몇시간사이에 통일문제해결에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한꺼번에 이룩한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대화전법과 애국충정의 위대한 결실이었다. ... 6.15 북남공동선언은 핵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였다.

14)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중학교 6년, 2008년, 교육도서출판사

■ 5027 작전계획과 제1연평해전에 대한 기술

1998년 5027 작전계획은 한미양국에 의한 북한의 침공시 반격계획이나 북한은 이를 <제2의 조선 침략전쟁> 이라고 규정하고 전쟁위협이 임박한 것처럼 묘사하였다. 또한 1999년 제1연평해전 (북한에서는 ‘서해상사건’ 으로 기술)을 왜곡 기술하였다. NLL을 침범한 북한경비정과의 교전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왜곡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¹⁵⁾

8. 적들의 군사적압력과 도발책동 분쇄

263 p

더욱이 미제 호전광들은 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의 내용들을 다른 나라의 출판물들에 버젓히 공개하는데 이르렀다.

265 p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괴뢰들은 1999년 <서해상사건>을 도발하였다. ... 그러다가 이해 6월 15일에 이르러서는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우리의 해군함정들에 불의의 총격을 감행하였다. ... 전투가 벌어져 30분도 못되는 사이에 우리의 해병들은 적함 2척을 완전히 바다에 처박고 10여척을 격상시켰으며 적병 100여놈을 살상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15)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중학교 6년, 2008년, 교육도서출판사

[토론]

북한 『현대조선역사』 등 역사교재의 ‘현대사’ 서술 분석

김신희 북한대학원대학 연구교수

www.hansun.org

공동체자유주의로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국민과 더불어, 역사와 함께, 세계를 향해”



한반도선진화재단

100-272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7, 407호

TEL : (02)2275-8391~2 | FAX : (02)2266-2795

www.hansun.org | E-mail : hansun@hansun.org